310.111
통14
2005

200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종 합 평 가 보 고 서

(요 약)

2006. 9. 20

2006

BJ4747

통 계 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평가 및 개선방안(요약)

1. 총 평(인구조사과장 신승우) / 3

2. 평가 및 개선방안 요약(분야별 담당자) / 18

2005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고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이 수행하는 조사업무 중 가장 큰 단위사업이다. 업무를 수행하고서 느낀 소감을 정리하는 것은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와 환류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띠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

총조사가 무엇인지? 총조사와 관련된 환경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하는지? 총조사업무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단위업무는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가?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잘한 것은 무엇이고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느낀 대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과장을 포함하여 인구조사과 전 직원이 자기가 담당했던 업무에 대한 평가 내용을 기록하려는 것이다. 직원이 평가한 내용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누락내용은 모르지만 의견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Ⅰ. 총조사에 대한 이해

인구주택총조사는 무엇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인가? 왜 조사하는가? 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다. 인구·사회·경제현상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할 수 있다. 범세계적인 통계조사(2000년 라운드 센서스에서 217개 국가 중 204개 국가에서 실시), 국가 기본통계조사(통계중의 통계, 가구부문 통계의 모집단으로 쓰이는 만큼 족보가 있다면 가구통계의 시조)이며 소지역 단위까지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조사이기도 하다. 특징으로는 완전성, 동시성, 개별성, 주기성을 갖고 있다. 대규모 조사인 만큼 응답부담, 조사비용, 조사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즉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관계상 실시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Ⅱ. 총조사와 조사환경

조사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대응해야 한다. 대규모 사업집행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의사 결정사항은 이러한 토대(환경)를 기초로 방향이 정립되기 때문이다.

- 소득수준의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개인주의 ↑, 사생활 보호의식 ↑)
  : 사회조사에 보수적(폐쇄적)경향, 3중의 door rock 주거문화 형성
- 여성의 경제·사회생활 참여증가(맞벌이 부부 증가)
- 가구구조변화(1~2인 가구 증가, 고령 또는 독거노인가구 증가, 만혼, 미혼, 이혼의 증가)
  : 주간에 적절한 응답자 부재현상 초래, one-two room 주거문화 형성
- 행정환경 : 일선기관의 통계기능 존재여부(2005년의 경우 약 80%가 시군구로 전환)
- 기술적 환경 : IT기술
- 자료대체성 : 행정자료 활용가능성 등
- 국제적 trend : 등록센서스에 대한 관심 제고, 조사기법 다양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 빈곤층, GIS에 대한 관심 고조, IT기술 접목으로 자료처리기간 단축

Ⅲ. 개념 정립과 Process 이해

총조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흐름과 각 과정의 단위업무에 도입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5년 주기 사업인 만큼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대규모 사업이기에 여러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분담하는 만큼 다른 분야의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자의적인 해석영역이 존재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센서스를 설계하고 지휘 감독하려면 센서스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사내용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원의 확보와 배분, 업무량 할당 및 업무지침, 시간관리,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Ⅳ.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단위업무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추진방침, 추진결과, 그리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환류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크게 나누면 준비단계, 실시단계, 자료처리단계, 결과 공표 및 활용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단위업무는 여건변화/중요도/

난이도/자원배분/주요특징/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단위업무를 세분하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로 느낀 소감을 기록한다.(예 : 조사구설정이나 분야별 세부계획 등은 준비단계에서의 검토내용이 실시단계에서 확정하는 만큼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위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논점이 있는 만큼 자의적으로 배치하고 느낌을 기록한다.

총조사 업무 분류

1. 준비단계
- 1.1. 자료수집
- 1.2. 시험조사(시범예행조사)
- 1.3. 각종회의 개최 및 운영
- 1.4. 조사구 설정
- 1.5. 예산 확보
- 1.6. Homepage 설계 및 운영

2. 실시단계
- 2.1.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2.2.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2.1. 조사항목 및 조사표 설계
  - 2.2.2. 교육훈련
  - 2.2.3. 인력동원 및 운용
  - 2.2.4. 본조사 실시 및 실사지도
  - 2.2.5. 홍보
  - 2.2.6.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
  - 2.2.7. 사후조사

3. 자료처리 단계
- 3.1. 자료처리시스템 설계
- 3.2. 자료입력
- 3.3. 내검
- 3.4. 결과집계 및 수준 분석
- 3.5. e-census

4. 결과 공표 및 활용 단계
- 4.1. 공표
- 4.2. 보고서 발간
- 4.3. 종합연구 분석

5. 기타
- 5.1. 표본추출
- 5.2. 평가 및 분석
- 5.3. 행정자료 활용
- 5.4. 사례집 발간
- 5.5. 인구통계 지식 공유
- 5.6. 인구통계 전문가 육성

1. 준비단계

1.1. 자료수집

총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은 과거 우리의 경험에 관한 자료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험 또는 연구에 관한 자료수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종합해서 주요 주제별로 정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센서스 지표 개발을 통하여 변화를 읽고 새로운 설계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1.2. 시험조사(시범예행조사)

시험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총조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있는 결과물이 요구된다. 검토의견을 논문수준으로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각종회의 개최 및 운영

내부회의(과, 통계청)와 외부회의(전문가, 관계기관)로 구분하고 주제별로 그 결과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내부의 경우 경험자는 물론 공모과정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면 의외의 수확이 있다. 바쁘기 때문에 생략될 우려가 있다. 횟수를 양적으로 늘리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산출물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조사구 설정

조사구 설정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을 기초로 만들 것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할 것인가?, 도중에 변하는 내용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상당액의 예산이 동원되는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단계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정립이 중요하다. 또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의 틀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균질한 조사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주요 관심 사항을 요약하면

i) 기본도와 조사구의 기초자료 활용방안(수치지도, 새주소지도)
ii) 기초단위구와 조사구의 연계 방안
iii) 가구수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방안
iv) 조사구 가설정 계획
v) 가설정 조사구 현지확인 및 심사 계획
vi) 조사구 변동관리 방안
vii) 조사구 제작 및 배부 계획
viii) 조사구 승인(확정)등에 대한 지침이 명확해야한다 조사구 수는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조사원, 조사용품 등의 수량 결정요소)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1.5. 예산확보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와 노력이 관심사항이다.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기본계획+센서스지표+조사환경+……), 설득력을 높이려면 기본계획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센서스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비교까지 가미하면 효과는 보다 높을 것이다.

1.6. Homepage 설계 및 운영

인구주택총조사 Homepage의 기능은 매우 크다. 의견교환의 마당이며 홍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수록내용의 질이 우수해야만 방문자에게 기쁨이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기에 site map 의 설계가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기능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질문에 대하여는 적시에 성실한 응답으로 대응해야 한다. Homepage 운영을 위해서는 2인의 전문가(web designer, programer)와 상담자가 필요하다

2. 실시단계

2.1.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종합시행계획에는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가?, 언제 만들 것인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전달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총조사 환경, 특징, 개요 등의 기본 내용은 물론 전반적인 추진일정, 인력동원 규모 및 시기를 포함하여 분야별로 다룰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소개되어야 한다. 주관기관과 실시기관이 다른 만큼 역할 분담의 근거와 분담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어느 시기에 계획을 전달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실시기관의 담당자도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가능하다면 2004년 10월을 전후하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록내용에 의견 수렴과정에서의 건의사항이 포함되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각종 계수 값(앞에서 제시한 센서스지표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정리(비교)하여 세부계획의 윤곽을 예측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실시기관의 업무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2. 분야별 계획 수립 및 시행

2.2.1. 조사항목 및 조사표 설계

인구주택총조사 전 과정중에서 어렵고도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할 분야이다. 의견 수렴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03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수렴, 국외 자료수집 및 비교, 용역의뢰, 전문가회의, 통계위원회 분과회의, 현장 적용시험, 결과표 검토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항목으로 선택되어 진다.

이견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충분한 검토의견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하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의되지 않고는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신축중인 주택을 언제부터 주택 수에 포함할 것인가? 파손정도를 파악하였다면 어느 정도까지 주택의 수에 산입 포함할 것인가? 좀더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최종 확정시기도 중요하다. 후속작업이 있기 때문이다(조사표 설계, 지침서 작성, 교재작성, cyber 교육 개발.... 등) 지역특성항목 선택의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설계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항목 선택으로 인하여 파급되는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조사표, 지침서, 결과표 연구검토 및 제표, 보고서 발간, DB설계, 자료관리 및 이용....)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업무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 보호 등 거부가 예상되는 항목예측 및 극복할 대안(예:사전 홍보활동, 국제사례분석 등)이 준비되면 좋을 것이다. 조사표설계는 응답 측면, 보관, 이동, 관리, 입력 등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조사항목을 제안하는 사람(조직)이 결과표(안)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처리부분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적자원의 한계로 결과표 검토시기가 자료처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2.2.2. 교육훈련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그들이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총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기위한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수단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훈련이라면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단계별 교육, 표준교안 개발, Cyber 교육 개발 및 운영, 교관단 합숙 훈련, 080 상담요원 집체훈련 등이

세부적인 계획에 반영되었다.

i) 표준 교육 제도는 교관단이 초기에 적응하지 못하여 그 효과가 충분히 발 휘되지 못했다.("표준교육 적응방법" 교육이 선행되어야 했다)

ii) cyber 교재 개발은 조사항목, 지침서의 후행작업이면서 개발기간이 필요한 만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교관단이 선발되기 이전에 완성되어야 그 기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다. 교관은 조사원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모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iii) cyber 교육에 대한 치밀한 설계(교육운용, 서버지원, 통계작성 등)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iv) cyber 교육의 주 대상은 조사원이다. 그들에게 무엇이 불편 했는가? (예 : 접속이 안 된다)를 살펴야 한다.

v)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자체 단위로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큰 만큼 시군구 공무원 교육단계에서 강조할 내용의 하나이다.

2.2.3. 인력동원 및 운용

인력운용 대상은 공무원의 경우 인구조사과, 통계청(지방청, 사무소),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사구 담당자가 있고 조사요원에는 총관리자, 지도원, 조사원, 업무보조원, 조사표정리요원, 입력요원, 심사요원 등이 있다. 그 외에 용역업무수행 인력이 있다.

i) 인구조사과 인력은 준비단계, 실시단계, 자료처리단계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운영해야 한다.

ii) 단위업무에서도 내부 동원이 발생한다. 필요시 과장의 통제가 요구된다.(예: 교육, 080지원)

iii) 통계청 인력동원은 사전예고가 필요하다. 장기간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 (예 : 교관단)에는 사전 교섭이 필요하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알리고(간부회의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출자가 필요 할 수도 있다.

iv) 동원인력에게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해야 한다.

2.2.4. 본조사 실시 및 실사지도

10만명 이상이 동시에 참여하는 시기이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의견이다.

i) 동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자의적 해석이 발생하면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Homepage를 활용하는 지침시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지침일 경우 080요원에게 적시에 교육시켜야 한다. 참고로 080상담에 대한 불만요인 중에는 "전화가 접속되지 않는다"와 "동일한 현상에 대한 응답이 다르다"가 대표적이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질문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듯 그 현상에 대한 응답도 동일목소리로 전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ii) 조사경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자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궁금증을 조기에 해결해 준다
- 절차에 따라, 지침에 의거(시키는 대로) 수행토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iii) "누가 누구를 지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한다", "지원한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조사업무에 임해야 한다. 특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희생적이고도 친절한 자세가 필요하다.

iv) 끝으로 조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극복 방안을 연구하여 표준화하고 여기서 제시되는 전략을 갖고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2.5. 홍보

총조사 환경이 어려워진 만큼 참여하는 인력이 보다 기분좋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총조사 예산의 10% 수준)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확보, 실행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였다.(조사구설정 용역사업의 자체수행, 주택DB 개발을 통한 인쇄비용절감 등의 예산을 홍보용으로 전환 투자)

체계적(단계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였다. 인지단계, 설득, 참여유도, 사후감사의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홍보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 전문기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요부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2005센서스에서 홍보는 성공적이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럼에도 조사애로항목에 대한 PR은 부족하였다. 또한 홍보매체의 종류가 많다보면 효과가 큰 것, 작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방송을 통한 PR과 드라마 PPL, 인터넷 홍보(특히 Count relay)등의 반응이 좋았고 종합적으로 인지도는 기대이상으로 높아

졌다. 각종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표준안을 제시하면 시간절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바쁜 시간에 담당자가 인터뷰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6.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추가 사업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i) 예산확보단계의 여건과 예산 집행단계의 여건이 달라진다(계수값의 변화, 업무수행방법의 변화 등)

ii) 인건비 비중이 높은 만큼 조사구의 규모에 따라 영향이 크다. 예측과 추가조정을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iii) 수십건의 계약과정에서는 낙찰차액이 규모있게 발생된다.(예비사업을 우선순위를 두어 확보하고 집행할 준비가 필요하다)

iv) 예산집행기관이 270여 곳(16시도+234시군구+특별조사 중앙행정기관, 12지방청·사무소 등)이 되는 만큼 집행잔액에 대한 대비도 충분해야 한다(1기관 100만원 발생시?→2.7억)

v) 인건비 비중이 높은 만큼 각종 보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기간에 따라 상이)

2.2.7. 사후조사

사후조사 설계 및 평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투입비용 대비 산출) 또한 사후조사 결과가 feedback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통계조사 결과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구통계가 만들어질때 사용하는 많은 기법이 이 과정에서 개발되고 있다. 경험과 기법이 동시에 중요시된다.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조직이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안정적인 기반이 구축된다 하겠다

3.1. 자료처리시스템 설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처리를 위한 입력, 내검, 결과집계, 결과표 출력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하는 작업이다. 본조사 시행단계에서 설계함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였다(시험조사 단계에서 검토하고 시범예행조사에서는 어느 단계까지의 완성된 설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2. 자료입력

자료량이 방대한 만큼 입력방법의 선택에 따라 자료처리기간에 영향을 준다 현지에서 입력하고 입력자료의 정도를 점검한다면 입력오류 누락 내용 등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입력의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예:처리기간 단축, 오류점검의 정확도 제고)

i) 자료입력여건을 사전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시간, 공간, 장비, 통신, 오류점검 프로그램 등)

ii) 자료입력 시스템은 편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3.3. 내검

내검에 대한 용어 정립(1단계, 2단계, 3단계)과 단계별 점검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검규칙을 누락없이 발굴하여야 한다(신규항목, 과거 및 선진국 경험) 아울러 내검과 관계된 통계는 이력을 관리하고 feedback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침서 작성 또는 교육단계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류의 원인과 유형별로 치료방법을 기록한다. feedback을 통하여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영역이다

3.4. 결과집계 및 수준 분석

오류내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응답으로 인한 오류는 경험과 통계적기법을 접목하여 추정하는 기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표본조사의 경우 승수 산출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특성값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처리 기법들은 micro data 이용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meta data로 등재하여 관리한다.

i) 무응답(단위무응답, 항목무응답) 처리

-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다. 항목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보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ii) 표본조사 결과 집계를 위한 승수 산출

iii) 계획된 결과표 형태로 집계하고 수준을 분석처리
- 특이치, 빈도,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iv) 자료를 확정하게 되면 관리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준비한다.
- micro data와 macrodata에 metadata를 정리한다.
- 관리할 DB를 설계하고 자료를 저장한다.

3.5. E-census

총조사에 IT기술이 어느분야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이라 하겠다. 인적·물적자원관리,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 지원, 자료처리, 통신분야에 적용되었다.

i) 인적· 물적자원 관리
- 총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관리라 할 수 있으며 채용단계에서 보수지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도록 설계
- 총조사에 투입된 조사용품의 관리로서 언제 어느곳에 얼마만큼 배분할 것인지 추가로 신청하는 절차와 재보급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

ii)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 지원
- 인터넷조사 방법을 도입하여 인터넷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필요한 집단에게 선택적 홍보를 통하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주택DB, 사회시설 명부 DB, 외국인 DB 등을 구축하여 조사자료의 정확도 제고 및 누락률 장지 대책으로 활용
- cyber 교육 시스템 구축 운용

iii) 자료처리

Web기반 현지입력, 자료처리 시스템 구축(오류점검, 결과집계, 결과표 출력 등) 등을 통하여 정확도 제고, 자료처리시간 단축, 편리성 제고 등에 기여

iv) 통신분야

080콜센터 운영, 자료송수신, 홍보(크로샷), 문자정보(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자료 송수신 또는 의견 교환

4. 결과 공표 및 활용

4.1. 공표

통계자료의 가치를 여러 가지의 요소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정확성과 신속성에 의하여 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 그만큼 공표시기의 단축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련의 자료처리 및 분석과정(내검, 수준점검, 결과집계 및 분석)이 공표이전에 선행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과정을 줄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확성과는 어느 정도 trade-off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공표시기 단축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공표이전에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단축하려는 목표보다는 최근의 경험과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늦어도 언제까지 공표한다는 방향이 정립되기를 바란다

4.2. 보고서 발간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는 최종의 산출물중의 하나이다. IT기술이 발달된 이후 보고서보다는 CD나 On-line 이용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보고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류기준이 무엇인가?(전수 vs 표본인가?, 전국 vs 지역인가?), 지역단위 특성항목을 처음으로 채택한 만큼, 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수록할 것인가?도 검토되어야 한다.

4.3. 종합연구 분석

통계자료는 많이 이용 될수록 빛이 날 것이다. 즉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계 이용수준은 국제적으로 볼대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책적 issue를 제기하거나 지역단위서의 활용가능성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학계와는 microdata 이용 활성화 방안을 공동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masking 기법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기타

5.1. 표본추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은 전수조사 항목과 표본조사 항목으로 구분된다. 조사지역도 전수조사지역과 표본조사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지역단위의 표본은 어느 규모로 어떻게 추출하는가? 동일한 비율이 좋은 것인가? 지역별로 차등을 준다면 어떻게 줄 것인가?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할 것인가? 어떠한 계층을 두고 추출할 것인가?(읍면동 단위 추출?, 시군구 단위 추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조사구역과 집단시설조사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에 답을 주면 표본설계 방향과 규모가 정리될 것이다. 조사원수와 관계가 있는 만큼 예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조사표류 배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사결정 시기도 중요하다.

5.2. 평가 및 분석

1회의 사업이 아닌 만큼 단위사업은 물론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는 feedback의 기초를 제공하므로 그 의미가 크다. 의사결정권자는 물론 담당자, 참여자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개인별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양자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위에 관계없이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를 위하여 자료를 집대성하는 평가작업반을 조기에 편성한다면 그 효과는 높아질 수도 있다. 다만 인적 자원의 한계 때문에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이 축소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5.3. 행정자료 활용

인구주택 총조사가 대규모 조사인 만큼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조사 환경은 가구구조변화, 소득수준향상과 가치관 변화, 주거문화변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가중된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가 행정자료 활용극대화(최대 100%→등록 census)이다. 현재도 조사구제작, 주택DB, 시설조사구현황DB, 외국인평부DB 등 다양한 자료가 총조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사항목과 행정정보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다.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자료활용 극대화라는 관점에서는 개인정보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사업체

고유번호), 주소, 성명(사업체명), 전화번호 등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주소, 성명을 입력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은 한층 더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

5.4. 사례집 발간

사례집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총조사에서는 질의응답, 조사체험수기등이 대표적으로 제작 활용 될 수 있다. 제작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목표가 달성되도록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5.5. 인구통계 지식 공유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주기 사업이라는 점, 사업규모가 방대한 만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이 정작 중요한, 즉 통계작성의 핵심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맹점을 띠게 된다. 센서스 행정만 했을 뿐 인구통계를 개념, 작성 과정과 작성 방법에 대하여 모르고 지나칠수 있는 여건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하는가. 적어도 인구통계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고 떠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

5.6. 인구통계 전문가 육성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인구통계 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우선은 이론적인 분야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다. 조사항목 선정, 자료처리과정에서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총조사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자를 선발하는 시기와 사명감을 부여하는 것도 이 분야에서 생각할 점이다.

V. 종합의견

▣ 대규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또한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1) 센서스 지표 개발 : 예산확보, 센서스에 대한 설득(홍보)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절차 준수 및 표준화 : ① 결과표 설계 및 검토시기 조정
   ② 자료처리 시스템을 시험조사단계부터 개발·보완
   ③ 실행예산 편성
   ④ 공표시기
   ⑤ 표준교육제도 정착
   ⑥ 보고서 체계
3) 시험조사(시범예행조사), 사후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결과를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
4) 조직에 의한 기능 수행 : 자료처리
5) 인구통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전문가 육성
6) 내검프로그램 개발 다양화 및 내검 실적 분석과 feedback
7) 명확한 개념 설정 : 주택의 개념 재정립(특히 생멸)
8)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계획시달+유대관계(권역별 설명회는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9) 기법연구 : Imputation, Masking 등 근거와 기법
10) 조사애로지역 표준화 연구

▣ 또한 조사환경과 조사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을 제안한다.

1) 행정자료 활용 극대화(항목단위로 등록센서스로의 전환방안 연구, 개인정보연결고리(예 :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확보방안 강구
2) 인터넷 조사 확대를 통한 조사비용 절감방안 강구
3) 홍보 강화를 통한 센서스/통계/통계청에 대한 인식 제고

2. 평가 및 개선방안(요약 : 분야별 담당자)

1> 인구조사과 조직 및 인력

평 가

○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은 전반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

○ 특히, 지방청 지원인력은 조사용품, e-census, 조사관리수첩, 080, 조사표 및 지침서, 사이버교재, 홍보, 조사구설정 및 각종 회의·설명회시 준비요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함에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컸음

○ 조사항목 설정단계에서 기획업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기획 및 분석 파트간의 업무추진 상 문제 >

- 조사항목의 적정성 검토 시 현장 조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업무와 협조가 필요
- 조사항목별 조사배경 및 필요성, 활용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흡
- 대외적으로 조사추진에 대한 각종 질의가 조사항목이나 조사표 등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획파트에서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곤란
- 조사완료 후 결과공표와 관련한 업무분장 애로
  - · 조사표 입력 및 내검과 관련한 업무추진은 분석파트에서, 결과공표는 기획파트에서 담당하는 것은 업무 추진상 어려움 초래

○ 조사구 설정 파트의 통계지리정보팀으로의 분리

- 총조사 추진방향 설정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 곤란

- 인력, 예산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상의 어려움 발생

○ 지원인력 투입시점(2005. 3월)이 다소 늦었음

- 모든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원인력이 투입됨으로 인해 기여도 반감됨

개선방향

□ 인구조사과 업무분장 안

< 구성안 예시 >

① 총괄행정 : 국 및 과 행정 총괄, 예산 집행 및 관리

② 기획 : 총조사 추진, 조사항목, 인력동원, 교육훈련, 조사용품 등

③ e-census : 인터넷조사, 온라인 조사관리, 조사원모집 및 관리 등

④ 홍보 및 차기 총조사 준비 : 대국민 홍보, 총조사 기록물 수집, 차기 총조사 준비

⑤ 조사구 관리 : 통계지리정보 팀과의 연계를 통한 조사구 설정관련 업무

□ 총조사의 추진과 사후처리 관련 업무를 시험조사 단계부터 동시에 준비

○ 전문 인력의 양성 : 총조사 추진, 자료처리 등

○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에서 자료처리와 관련한 구체적 방향 및 방안 설정

□ 지원인력을 시범예행조사 이전에 충원

□ 조사 실시 후의 파트 간 업무 불균형 문제와 관련한 사전 대비 필요

○ 새로운 업무의 개발

○ 기획파트 인력의 분산 배치 및 업무 재분장

2› 시험조사

평 가

❑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대하여 시험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였음

○ 읍면동 총관리자 운용, 업무량 및 조사기간 확대, 크로샷 홍보, 웹기반 현지입력 및 내검은 시험조사시 검토, 개선된 사항임

- ICR 입력방법의 경우에 3차 시험조사까지 적극 검토된 바 있으나, 한글부분의 낮은 인식 등으로 특별조사구에서만 적용

❑ 그러나, 일부 분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음

○ 5차례의 시험조사 실시에 따른 준비·마무리 기간 부족으로 일부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부족

- 매 조사는 계획수립부터 결과분석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나, 제3차~제5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평균 4개월 정도였음

- 각 차수마다 검토할 사항이 미리 준비되지 않거나, 결과분석 완료 이전에 차기 시험조사 실시시기 도래로 결과분석 다소 미흡

○ 조사표 입력 및 내검의 경우, 시스템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는 비교적 잘 이루어졌으나, 내검spec 및 집계에 대한 검토는 다소 미흡

- 조사항목의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조사표 설계, 지침서 작성, 입력·내검 및 집계프로그램 개발시기 등도 지연

- 처음으로 도입한 웹기반 입력 및 내검시스템에 자체 개발인력 부족

○ 또한, 사이버 교재 및 인터넷조사는 시범예행조사시 처음 검토하였고, e-census 통합시스템은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시 미검토

개선방향

- ❑ 내실 있는 시험조사를 위해 실시횟수 축소 검토가 바람직함. 단지, 조사항목에 대한 현장 적응성은 소규모로 추가 실시
- ❑ 시험조사의 경우도 조사항목은 조사실시 4개월 이전에는 선정하여 조사표 설계 등 연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 본조사에 적용하는 모든 분야는 반드시 시험조사시 검토 실시

3› 조사항목 선정

평 가

❑ 2005년 총조사에서의 특징

○ 시도항목
- 지역적 관심사항 기관장의 관심 유도에 일정부분 기여한 바 있음
- 개인적 의견을 설문하는 항목 다수 존재
- 심도있는 검토가 없어 비용대비 효과 반감
- 각 지자체별 3개로 구성된 시도항목만으로의 자체 분석은 유용성이 떨어져 부득이 전국항목과 연결하여 집계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전국항목 원자료 제공이 불가피하게 되어 자료의 유출 문제가 대두

❑ 신규항목 추가시 고려사항

○ 일부 부처의 정책기초자료 요구
- 각 부처에서 요청한 항목 중에는 타 자료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자료의 시의적 제공이 필수적인 항목으로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었음

예1) 제대군인 수 : 병무청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반영 불필요함

예2) 정보화 기기 보유현황 : 2000년 총조사 자료가 있으며 해당 항목은 시의성과 짧은 조사주기를 필요로 하는 성격의 항목으로서 특별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 추가 선정항목에 대한 현장 적응성 검토 부족

○ 통일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채택된 '남북이산가족' 항목의 경우 막바

지에 추가가 결정되어 충분한 현장 검토를 실시하지 못해 실제 조사 시 이산가족의 다양한 형태, 가족관계 설정, 명확한 기준 적용 등에 어려움 겪음

○ 근로장소 항목도 막바지에 추가된 항목으로서 직업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응답 카테고리 설정에 대한 연구 및 실제 데이터 검토 부족

-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 당초 항목팀 내부 회의를 거쳐 조사지침서에도 '거리'를 근로장소로 보고 개념을 정리하였으나 향후 재해석이 이루어져 '일의 목적을 수행하는 장소'를 중심 기준으로 결정

- 또한 '운송수단'과 '거리', '야외 작업현장'과 '사업장(땅)'과의 구분에 있어서 경계에 속해 있는 직업군(예: 비닐하우스 종사자, 택배기사, 이삿짐 센터 등) 에 대한 실제 데이터 검토를 통한 연구가 필요

개선방향

❑ 시도항목

○ 시도항목 수요조사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실시하여 내실있는 항목 선정과 심도있는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조사가능성을 철저히 검토 필요

○ 개인적 의견이나 성향을 묻는 항목을 최대한 피하되 지자체 정책 필요성이 커 부득이 항목선정이 불가피할 경우엔 타깃이 되는 응답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료 유용성의 극대화 필요

❑ 주택의 요건 및 생멸에 대한 개념 재정립 필요

○ 현재 작성된 주택의 요건은 화장실이 제외되어 있는데 주택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건교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택의 생멸에 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관련 통계작성 협의 필요

❑ 관계기관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 여성부, 통일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
- 직접 방문 또는 개별회의소집
- 청장에 의한 기관장(장·차관) 관심 촉구 등

❑ 철저한 현장적응성 검증

○ 시험조사시 추가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목을 포함시켜 현장적응성 사전 테스트 필요함
○ 조사항목 선정 막바지에 항목 추가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현장 테스트가 불가능하므로 불요불급한 항목의 추가는 강력히 배제하여야 함

❑ 프라이버시 침해정도 중점 고려

○ 날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의 민감한 항목으로 인해 조사 전반에 대한 거부 발생 및 집단적 거부운동의 빌미가 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향후 항목선정에서는 프라이버시 관련성을 제일의 선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시험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점검 필요

4>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작성

평 가

❑ 조사표

○ 일반조사표내 외국인 '국적'란 설계

- 2000년 총조사시 실제 한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을 강제 분리하여 별도의 외국인 가구로 처리함에 따라 가구수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한 가구내에서 같이 조사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
- 또한, 국제결혼한 부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외국인 처를 별도의 가구로 분리해서 조사함으로써 오는 응답자의 반발을 줄일 수 있었음
- 외국인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된 외국인과 한국인과 동일 가구내에서 조사된 외국인 간의 조사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외국인 집계시 문제 발생

○ '주거시설형태' 항목중 수도의 종류는 현재 4분류로 되어 있으나 최하위 개념의 수도 시설인 '소규모 급수시설'이 누락

- 현재 수도에 관한 조사항목 카테고리
  ① 상수도 : 광역수도 등 대규모의 수도시설로 일반가구에 공급
  ② 마을(간이)상수도 : 일반주택이나 빌딩 또는 일정한 지역 등의 소규모(급수인구 100인~2천5백인 이내) 급수시설
  ③ 자가(전용)수도 : 기숙사, 사택, 요양원, 학교 등 특정시설에만 공급하는 수도
  ④ 없음

○ 시도별 특성항목으로 인해 16종의 조사표를 각각 인쇄해야 하는 과정에서 조사표별 검수에 애로가 있었음

- 일부 시도의 조사표 오류발생으로 재인쇄
- 조사표별 색도 불일치

○ 외국인조사표의 '가구구분'과 일반조사표의 '가구구분'의 명칭구분 필요

- 외국인조사표의 '가구구분'은 ① 주인(대표)가구, ② 동거가구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조사표의 '가구구분'은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 ⑩ 기타 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가구 로 구분되어 서로 동일한 항목명을 사용하면서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자료처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여 내부 항목명을 별도로 정해 적용한 바 있음

○ 응답자 편의를 최우선 반영하되 조사, 입력 및 내검 측면도 함께 고려
- 고령화 진행에 따라 글자 크기 확대: 8p(2000) → 10p(2005)
- 시각적인 효과 제고를 위해 색상 추가: 1도(2000) → 2도(2005)
- 취급하기 편리한 크기 및 방법으로 제작: A4, 표본-책형, 전수-낱장형
- 항목마다 기입예시를 배치하여 응답편의 도모

○ 시·도 항목은 표본조사표 마지막 페이지에 배치
- 시도별 조사표 별도 인쇄(16종)

○ 지방분산 발주로 조사표 인쇄 및 배부의 효율성 제고

❑ 조사지침서

○ 조사원의 가구방문, 응답자 면담 등과 관련한 지침 미흡

○ 개념이 어렵거나 현장조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항목에 대한 추가설명 부족

- 남북이산가족, 근로 장소, 미혼모 등

개선방향

❑ 조사표

○ 일반조사표내 외국인 조사관련

- 제 1안:

일반조사표에 외국인 조사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여 한국인과 동거하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가구 조사시 한국인의 조사내용을 생략하고 별도의 외국인 조사란에 조사되도록 설계

- 제 2안:

외국인 조사에 있어서 무조건 외국인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하되 한국인과 한 가구내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는 가구번호를 동거하는 한국인 가구의 거처 및 가구번호를 부여하여 한 가구로 처리

○ 2005년 총조사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 상수도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별도 카테고리 신설 필요

※ '간이급수시설' : 100인 이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서 급수시설로 지정받아 사용

○ '가구 구분' 항목

- '가구 구분' 항목에서 '②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는 구체적으로 '가족+ 5인 이하의 가족이외 사람'의 개념으로 차후 조사에서는 지면을 할애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⑤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는 구체적으로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족이외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개념으로 차후 조사에서는 지면을 할애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지침서

○ 조사원의 가구방문시 응답자를 대하는 요령 및 응답자 설득방법 등과 관련한 지침부분을 확대 수록하여 점증하는 조사비협조에 대응

○ 남북이산가족, 근로 장소, 미혼모 등 개념이 어렵거나 현장조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항목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 추가 설명

5> 시범예행조사

평 가

○ 조사원 모집 및 운용 ⇒ e-census 적극활용
- 농촌지역, 자연부락, 영세민 밀집지역의 조사원 확보 곤란
- 조사원의 책임의식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는 경향

○ 총관리자 ⇒ 수시 교육체제 정립
- 사전훈련 및 수시교육 체제 부족
- 거주지역과 상이한 지역에 배치함에 따른 조사요원과의 마찰

○ 교육 ⇒ 표준교안 작성
- 현장중심의 사례교육 부족
- 표준교안에 의한 통일된 교육 미흡
- 사이버 동영상 교육교재의 내용 및 활용방법 보완 필요

○ 업무량 배정 ⇒ 전수 아파트 조사원 업무량 확대(4개→5개)
- 표본조사, 단독주택 조사구 담당 조사원의 조사곤란 및 업무량의 상대적 과다 불만
- 집창촌과 같은 특수지역에 대한 표본조사구 선정시 대책필요
- 조사구의 면적이 넓거나, 이동거리가 먼 조사원의 불만
- 잔여조사구 담당 조사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문제

○ 조사구 지도 ⇒ 조사구 요도 및 기본도 검수 강화
- 지도의 정확도 미흡
- 지도 배부시기 문제

○ 조사용품 ⇒ 읍면동 단위 포장, e-census 적극 활용
- 조사용품 배부체계 강화 필요(읍면동 단위 포장 방안 검토)
- 일부 조사용품 과부족 발생
- 조사표의 연령별 배색, 가구명부 서식개선, 연락전 포스트 잇, 가구

스티커 크기 및 야광, 가방 디자인, 조사원증 시각적 개선, 받침대 크기, 문구용품 질적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도출

○ 홍보 ⇒ 음성 자동 메시지 효과 확인 및 불만 대응 준비
- 음성자동 메시지 송출에 대한 일부 민원성 전화(구청)
- 홍보물 부착 장소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 강화 필요

○ 준비조사 ⇒ 준비조사 기간 확대(1,2일→2,3일)
- 단독주택 조사구의 준비조사 기간 부족
- 준비조사 과정에서 추가 파악된 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 준비조사 기간 중 통·리 반장의 협조유도 필요

○ 본조사 ⇒ 080 전문요원 확보 및 교육강화, 인구과 직원 상주
⇒ 부재,불응가구 처리 지침 준비
- 조사지침서의 일부 항목에 대한 개념 불명확에 따른 혼란 초래
- 080전화 및 현장 지도요원의 상담 및 지도내용이 일부 상이
- 부재·불응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책 강화 필요
- 기숙사, 특수사회 시설 등에 대한 조사방법 구체화 미흡

○ 읍면동 내검 및 조사표 정리·제출 ⇒ 내검기간 확대(5→7일)
- 읍면동 내검 기간이 다소 짧다는 의견
- 내검 및 조사표 정리·제출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 미흡

○ 시군구 입력 및 내검 ⇒ 프로그램 개발완료 및 바이러스 사전 대비
- 입력 및 내검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점검 미흡
- 입력 중 시스템 운영 중단사례 발생
- 내검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 미흡

○ 종합의견
- 시군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 시범예행조사 평가대회(속리산)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됨
- 표준교안, 지침서, 사이버교육교재, 인터넷 조사 등과 관련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음

- 잔여조사구에 대한 수당, 조사원 업무량 배정 등 관련 지침 미흡

개선방향

❑ 실시지역 선정은 시험조사 실시단계에서부터 준비

○ 대상 지역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준비

⇒ 해당지역 공무원 해외시찰, 특별예산 확보방안 모색 등

○ 시험조사 등의 실시지역 선정 시 시도별 사전 안배

❑ e-census(특히 인터넷조사) 관련 프로그램은 시범예행조사 실시이전에 완벽하게 구축

❑ 표준교안, 지침서, 교육교재 등은 시범예행조사 시에도 최대한 완성품으로 적용

○ 지침서, 교재 등은 실시년도 1년 전에 전문 업체에 외주의뢰

6>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평 가

❑ 2004년 3월, 기본계획을 별도수립(2000년 미수립)하여 사전부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준비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 2002년부터 각종 용역, 워크샵 등을 통하여 2005년 총조사의 추진 방향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 이루어 짐

❑ 종합시행계획은 사전에 많은 토론과 고민을 거쳐 3월에 수립 완료함으로써 2000년보다 4개월 빨리 수립

○ 동 계획에 의거 각종 준비업무를 일관되게 준비할 수 있었음

❑ 추진결과 종합시행계획의 내용 중 미흡한 부분 파악됨

○ 증가하는 기숙시설, 고시원, 오피스텔 등과 같은 조사구 또는 집단지역에 대한 조사추진에 대한 별도 지침이 미흡

○ 업무보조원의 수당 저조, 조사원 수당의 19일 제한(예비조사원의 경우 20일 근무한 경우 발생), 중도 포기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등이 미흡

○ 업무보조원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나, 보험관련, 휴일수당, 근무일수 산정 등에 혼선이 많았음

○ 조사원의 휴일근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미비

- 부천시 조사원이 휴일근무수당 추가(1.5배) 요구와 관련한 노동사무소에 민원 제기

- 조사원을 도급적 성격으로 채용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3대 보험에 가입한 것은 모순(조사원 보호차원)

○ 동 계획 내에 총조사의 활용 및 필요성과 관련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지적 있음(품질평가 관련 교수)

❑ 권역별 설명회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실시기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통계청과 실시기관간의 유대강화 및 공감대 형성, 관련 공무원의 책임감 및 사명감 고취 등 매우 큰 효과가 있었음

○ 권역별로 실시하면서 각 시도별로 관내 시군구 공무원의 단합의 계기도 됨

○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현장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 도출로 실제업무 추진 시 개선

개선방향

❑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조사추진 지침 구체화 및 방안 마련

❑ 업무보조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 존치필요성 검토 : 읍면동에서는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 중심으로 운영(조사관리자 수 확대로 대체)

⇒ 존치할 경우 수당지급의 규모,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와의 관계, 휴일근무수당, 근무일수 산정, 보험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시달

⇒ 채용단계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과 근무조건에 대한 확실한 이해 후에 채용토록 지침 시달

❑ 조사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 사전 구축

⇒ 예산확보 단계에서부터 노동부 대전사무소나, 노동부 본청을 직접 방문하여 법적 해석을 득해 놓고 추진

❑ 조사원 수당과 관련하여 2005년의 지급방법을 재검토

⇒ 근무일수가 총 19일이 넘는 조사원에 대한 수당 지급방안 재검토

⇒ 중도포기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 종합시행계획에 총조사의 필요성 및 활용분야를 포함하고, 이번 총조사의 현장조사와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내용을 모두 수록

⇒ 조사원 교육내용에도 포함

7> 조사체계 확립 및 실시본부 구성 · 운영

평 가

❑ 2005년 3월 실시본부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조사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격적인 준비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 과거 선례 답습적인 전시행정 위주의 실시본부 구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 중심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

❑ 실시본부 구성 인력 충원 지연 및 사무공간 부족 등으로 업무 추진 애로 발생

○ 실시본부 지원 인력을 실시본부 발족이후 충원으로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가 낮음

○ 실시본부 구성 인력의 분산 배치로 하나의 단위업무 추진 애로 발생(과장, 조사기획팀, 조사개선팀, 홍보팀 및 행정지원팀은 12층 사무실, 조사구 설정팀은 11층 사무실 및 1동 18층, 조사항목팀은 10층에서 근무

○ 실시본부 구성 계획 및 실시본부 규정이 시행된지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본격적인 준비업무 기간에 조사구팀의 직제변경에 의한 통계정보국 소속 이전으로 혼란 가중

○ 총무과 경리 및 용도계 소속 직원을 실시본부 구성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에 대한 책임감 및 소속감 저하

❑ 소방방재청의 신설 등 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개정 추진

○ 조사연도의 기준일시,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개념· 정의 등을 명확히 하고, 조사사항, 권한의 위임 등 포괄적으로 개정

○ 본격적인 조사 준비 기간에 규칙 개정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업무 과부하 현상이 발생

개선방향

❑ 실시본부 구성 인력의 적정시기 충원 및 사무공간 확보

○ 실시본부 지원 인력을 시범예행조사 실시 이전에 충원 필요

- 실시본부 발족이전 시범예행조사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시본부 구성 인력의 사무실 통합 배치가 반드시 필요

○ 총무과 경리 및 용도계 소속 직원을 실시본부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 실시본부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필요

○ 2005 총조사시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의 실시본부 운영, 조사원 관리, 현장업무 추진 등을 위해 소요되는 필수경비(일반수용비 : 실시본부 관련 수용비, 업무추진비 : 음료, 다과류 및 간담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읍면동 사무소의 원활한 현장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 예산(업무추진비, 휴일근무 수당 등) 확보 및 지원 필요

○ 조사기간이 20여일간 지속되므로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지급이 요구됨

- 총조사 등 통계업무를 지원하는 읍면동 공무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원되는 선거업무 담당공무원에게 특별근무수당 지급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검토 및 개정 예상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 필요

○ 시범예행조사 실시 직전후에 주요 환경 변화 및 법령의 검토

○ 본격적인 조사 준비 기간에 규칙 개정의 추진으로 종합시행계획에 미반영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8> 조사구 설정 및 지도제작 배부

평 가

□ 조사구 설정

○ 조사구설정을 위한 기초조사(거처별 가구수 파악)시 2000년 총조사 결과 조사구경계, 가구수와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AIS)의 변동 건물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나,

- 기초조사결과 당초 예산에 반영된 추계가구에 비해 970천 가구가 증가하여, 부득이 조사구당 평균 63.6가구로 경계 설정을 하게 되어 조사원 적정 업무량 배정이 다소 어려웠음

○ 통계업무 기능전환 등 지자체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조사구의 균질성과 적정 조사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가설정 업무를 통계청에서 직접 수행

○ 조사구 설정 전반에 걸쳐 가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하였고, 범위가 넓은 산간지역이나 조사가 힘든 오피스텔 등 취약지역에 대한 거처별 거주여부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본조사에 까지 영향을 미침

□ 조사용 지도

○ 2000년 총조사 이후 수차례 보완해 온 최신 수치지도와 더불어 도로명 및 건물주소로 이루어진 "도로명주소 지도(새주소 지도)"를 통계조사용 지도로 재구성하여 활용

○ 주택의 65.1%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정면 전개도를 제공하여 조사의 정확도 및 편의성을 제고

○ 반면, 수정사항의 정확한 입력과 지도의 도엽갱신(1/25,000→1/5,000)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계 공무원 및 조사원의 불만이 많았고,

거처포인트 등 GIS DB 구축 사업에도 어려움을 초래

- 특히, 산간 및 도시외곽의 1/5,000지역은 주택이외 부속건물이 모두 나타나 있고, 1/25,000 지역은 현장과 너무 괴리된 지도로 거처확인이 어려웠음(1/25,000지역 : 307읍면동 5,507조사구)

□ E-census 시스템

○ 조사구 설정 과정에서 산출된 조사구 정보가 e-census시스템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고, 구축된 시스템은 조사구 업무에도 적극 활용

- 구축 측면 : 주소 DB(새주소, 공동주택) 및 조사구 정보 제공
- 활용 측면 : 시스템을 통한 조사구 수정보고(등록, 삭제, 수정)

○ 인터넷 조사를 위한 주소DB 구축은 새주소 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으로 한정

개선방향

□ 조사구 설정

○ 2010년에는 2000년, 2005년 기초조사 조사구설정 결과 가구규모별 조사구 분포(조사구 균질성), 평균가구수,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조사 방법을 결정

- 과거년도 총조사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조사구별 가구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사구 설정 당시부터 편차를 줄이는 방법 필요

○ 조사구수는 총조사의 각종 물량과 인력동원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사구 정보(조사구수 등)를 조기에 제공하여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

○ 시설조사구 등의 기준설정 시 실시본부 각 팀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함께 본조사, 자료처리 및 집계까지 고려한 조사구 설정 기준

수립 필요

- 시설 기준, 조사방법(조사원 배정) , 관광호텔조사구 폐지 등

○ 조사구 설정 및 본조사시 조사난이도(조사원 動線, 지역여건 등)가 높은 취약지역(산간지역, 오피스텔 등)에 대한 가구수 파악방법, 업무량 배정 등의 특례 기준 필요

○ 조사구 경계 구획시 기초단위구 경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초단위구 경계의 "1:1, 통합, 분할" 중 분할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 조사용 지도

○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에 가장 적합한 "도로명주소 지도(새주소 지도)" 추가 제작 지도를 적극 도입하여 차년도 총조사에 대비

○ 용역 수행방식의 개선으로 수정보완된 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변동(신축, 철거) 지형지물을 통계청 레이어로 별도 관리(바탕지도 원본은 변동없이 유지)
- 작업파일과 출력물에 대한 이력관리

○ 농촌 산간지역, 도시외곽 지역의 조사용 지도 개선

- 현재 1/1,000, 1/5,000, 1/25,000축척으로 혼재해 있는 바탕지도를 전국 1/5,000이상으로 갱신하고 부속건물이 많은 지역은 거처묶음 전산화를 실시

□ E-census 시스템

○ 조사구 정보 제공시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시스템의 업무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변동조사구 관리 등 조사구 관련 업무처리를 시스템을 통해 수행

○ 인터넷 조사의 주소 DB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소 확인작업을 기존 주소 검색 방식에서 지도(GIS) 검색 방식으로 전환하여 응답자 편의적인 응답환경을 구축

9> 예산편성 및 확보

평 가

1. 예산 확보 부문

□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예산 편성 및 확보 용이

○ 기본계획에 따른 조사규모 및 조사기간등의 확정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출이 용이

○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시에도 기본계획을 근거로 제시하여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됨

○ 다만, 2004년 초반 1779억원으로 편성되었듯이 기본계획이 좀더 일찍 수립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2.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

□ 협의 과정은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갔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계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수 있음

○ 최초 1779억원 편성시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대충 작성하라고 한 후 이에 세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설명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 지속적인 설명자료 작성이나 협의시 예산계에서 기획예산처의 정확한 의도가 전달되지 않아 2~3번 재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음

3. 삭감을 대비한 일부 항목 과다 편성

□ 과거의 전례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국회에서의 삭감을 대비하여 일부 항목을 과다하게 편성(특히, 홍보비의 삭감에 대비)

□ 주요 과다 편성 부분

○ 주택db 자료집 발간의 경우 삭감을 감안하여 13억 증액 편성

○ e-censu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임차료 편성시 입찰시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편성(5억)

- 지자체 입력용 PC 지원 부분 과다 편성(6억)

○ 조사용품류 제작 관련 과다 편성(10억)

- 가구명부 수량 산정시 산식의 오류를 알면서도 그대로 편성(3억)
- 각종 조사표류의 단가 증액 편성 등

□ 예산 편성이 사업시행 1년전에 편성되므로 실제 사업 시작시 발생될 수 있는 변동 요인에 대처하자는 의미가 있어 다소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2005년의 경우 약간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음

4. 각목명세서 개선

□ 각목명세서는 각종 업무 파악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해당 업무의 기본 골격을 나타냄

□ 과거 총조사는 총액 예산 형태로 편성되어 조사용품, 여비 등에 세부사항이 표기되지 않아 각목별 금액 이외는 활용도가 적음

□ 2005년도는 각종 조사용품 및 여비 등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여 2005년도의 업무 흐름을 일괄적으로 알 수 있게 편성하였으며

○ 조사용품도 세부 품목까지 서술하여 향후 총조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

5. 기타 사항

□ 조사구파트에서 조사구수 산정이 늦어져 실행 예산 편성시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며, 조사구 설정 당시 가구수가 현실보다 100만 가구 과다하게 설정된 측면에 대한 대책이 부족

□ 4대 보험료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예산 집행시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

○ 일반적으로 3대보험료(고용,산재,국민)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4대보험(건강 추가)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도 필요

□ 일부 항목에 대한 지자체 배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대략적인 실행 예산만 편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

○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확보시 중앙 배정분을 몰라 추가 확보 부분을 몰라 추가 확보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음

○ 또한, 편성예산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 별도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못하여 실무자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업무를 수행하였음

개선방안

1. 인건비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 검토 필요

□ 조사요원의 경우 일용제인지 도급제인지 불명확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통한 사전 기준 마련 필요

○ 청에서 운영하는 자문변호사를 활용 사전 기준 마련 필요

2. 예산 확보시 적정한 예산 편성

□ 예산 편성 당시의 상황에 맞는 예산 편성 이외에 익년에 집행될 경우를 감안하여 일부 예비비 형태의 예산 필요

○ 2005년의 경우도 각종 보험료를 감안하였으나,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예산 부족여부를 걱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더라도 예비비 필요

3. 기본계획의 조기 수립 필요

□ 기본계획이 있는 경우 예산 수립의 기초가 되며 예산 부서와의 협의시에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되므로 기본계획은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실행예산의 조기 편성 및 지자체 예산 확보

□ 예산 확정 후 연말에 실행예산(안)을 편성하여 익년 초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실행예산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자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조사실시 전년 초에 지자체에 예산 편성 협조 공문 발송 및 독려 필요

○ 실행 예산 편성 후에도 조속히 지자체에 통보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10› 인력동원

평 가

❑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인력동원 실시

○ 종합시행 계획,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인력구조별, 인력 동원 단계별 성공적으로 사업완료

○ 각종 통계조사 유경험자 및 인구주택총조사 유경험자의 활용으로 우수한 조사요원 확보함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총관리자 제도 도입, 업무량 증가에 따른 채용기간 연장(조사기간 연장)으로 조사요원 수 축소 운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관단 참여로 교육 및 역할 강화로 성공적인 현장조사 관리 및 조사원 지도업무의 성공적 수행

○ 조사원의 채용 및 관리, 수당 지급, 보험가입 업무 등을 e-census 시스템을 통한 추진으로 업무의 대폭 간소화 기여

○ 조사원 모집시 언론매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많은 인력이 응모

❑ 인력동원 단계별 잘된점

○ 중앙교관단 : 가급적 사무관 중심으로 7급 5년차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관단 유경험자 및 업무 능력 우수자 중심으로 인력동원

- 별도의 장소를 선정하여 1박 2일간 외지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가 배가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중앙교관단 참여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 다만 통계청 기능직 공무원 및 참여하지 못한 직원에게 담당 실무

자가 욕을 많이 먹음

○ 공무원 교육 : 가급적 사무관급 및 베테랑 주사급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지방자지단체 공무원에게 반응이 좋았음

○ 조사요원 교육 : 표본 조사원 교육은 가급적 경험자 중에서 베테랑급 직원을 교관으로 선발

○ 본조사 인력동원 : 실사지도 및 현장조사 지원의 2원화로 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크게 기여(본청 직원 : 실사지도, 지방 직원 : 현장조사 지원)

○ 조사표류 정리·제출 : 별도의 교관교육 없이 시군구별 실사지도 책임관 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교관요원)이 직접 실시

○ 조사표 입력·내검 : 심사입력실 주무관의 교육참여 및 실시지도, 전산 용역업체 주관 보조요원 상시 상주로 현장관리 원활

○ 기타

- e-census 시스템의 운영으로 조사요원 관리, 각종 인력동원 양식 전산화, 총조사 관련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

- 지방

❑ 인력동원 단계별 아쉬웠던점

○ 청장/차장 : 2000인구주택총조사시 16개 시도별 체계적으로 청장의 언론인 설명회, 시도 방문이 있었으나, 2005년 총조사시에는 체계적이지 못하였음

- 특히 통계청 차장은 시도 방문 기회를 갖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음

○ 중앙 교관단 :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교관단 교육시 교관으로 참여하지 않음

○ 공무원 교육 : 교관요원과 별도로 부교관을 임명하여 1조 2인으로 하여 센서스 교육의 내부 저변확대, 유사시 대비 등의 조치가 필요

○ 조사요원 교육 : 일부 교관이 2일간의 교육을 하루동안에 마침으로 교육의 부실화 초래

○ 본조사 인력동원 : 실사지도 및 현장조사 지원의 2원화로 일부 지방청(사무소) 직원의 불만이 있었음

○ 조사표류 정리·제출 : 중앙교관단 교육시 동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하지 못함

○ 조사표 입력·내검 : 교육 및 실사지도시 많은 우수 인력동원으로 조사표 입력·내검 인력동원시 어려움이 많았음

○ 기타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요원 채용시 제비뽑기, 추첨 등의 방식 채택으로 민원이 상당수 발생

개선방안

○ 향후 총조사시 청장과 차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와 관리가 필요

○ 16개 시도와 원할한 협조체계 구축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서울특별시는 별도로 관리하여 국장급 이상 간부의 관심이 필요

○ 공무원 및 조사요원 교육시 부교관 임명(1조 2인)으로 교육 보조요원 활용 및 내실화

○ 조사요원 채용에 대한 명확한 채용기준을 기회가 있을때 마다 재차 강조하고, 시도에서 적극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유도

11> 교육훈련

평 가

1. 외형적으로는 제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청내 및 지자체 교관단 교육 시에도 충분한 교육기간이 아님

○ 각종 조사용품에 대한 교육도 미비하여 단순 진열만으로 대체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본청 직원 중에서 현장 조사 경험이 없는 직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과거 경험만을 믿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및 교관 제외도 검토할 필요

□ 교관(통계청,지자체) 교육 기간을 좀 더 늘려(3일) 심도 있는 교육필요

2. 조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교육은 처음 도입한 방법에 비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 방안을 좀 더 강화하여 발전 시킬 필요가 있음

□ 사이버 교육 도입시 말이나 글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자는 취지가 있었으나 일부는 실행(조사구요도 관련) 되었으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부분은 미미하여 효과가 반감한 것으로 보여짐

○ 2005년 본조사를 대비하여 각종 시험조사에서 특이 사례 및 각종 형태의 건축물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없어 이를 제대로 활용 못한 부분이 아쉬움

3. 총조사 교육기간이 거의 2달에 달하여 타과 직원 동원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동원이 힘듦

4.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조사용품이 사전에 제작되어야 되고, 특히, 조사

표나 지침서는 당연히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제작이 지연되어 사전에 충분한 교육 준비에 어려움이 많음

□ 이는 조사항목이 늦게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조사항목을 사전에 조기 확정하여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준비가 되도록 할 필요

○ 조사항목은 최소 3월에는 확정되어야 각종 조사용품을 제대로 제작할 수 있음

개선방향

1. 조사용품(조사표, 지침서 등)의 사전 제작

□ 모든 조사의 중심인 조사항목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조사용품 제작 지연 및 교육의 부실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 확정이 반드시 필요

○ 시범예행조사를 끝으로 조사항목을 종결하고 익년 3월에 최종 확정

2. 교관단의 사전 확보 및 사전 교육 실시

□ 본청 직원의 교관단 동원 방안

○ 반드시 현장 조사원으로 투입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알게 할 필요

○ 타 국 동원이 어렵다면 사회통계국 내에서라도 시험조사에 많은 직원을 동참시켜 본조사 전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 시험조사 후에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회국내 워크샵이나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직원들 교육

□ 지방청 및 사무소 직원 동원 방안

○ 반드시 현장 조사원으로 투입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알게 할 필요

○ 시험조사마다 인근 지방청 및 사무소의 직원을 동참시켜 이를 계기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총조사 담당자를 육성

○ 지역별 담당자는 시험조사마다 참관시키거나 조사원 등으로 투입

□ 지자체 직원의 동원 방안

○ 지자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총조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전 교육 실시

○ 매년 시험조사 실시 전후에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

최하고 시군구는 시험조사 실시 지역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전 교육 실시

□ 통계연수원의 교과 과정을 이용하는 방안 검토

○ 통계연수원의 교과 과정 중에 총조사 지침을 포함시켜 교육하거나 특정 시기(2010년) 별도 강좌를 만들어 본청과 지방청 및 사무소 직원을 강제 연수케하여 사전 교육 실시

○ 전 직원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통계국, 지방청(사무소) 사회조사과 직원만이라도 연수

3. 교관 동원 기간과 우수 인력 동원

□ 동원되는 인력을 감안하여 교육 기간을 줄이고는 있으나, 좀더 기간을 줄여 타과의 부담을 줄일 필요는 있으나, 현재로써는 뚜렷한 방안이 없음

□ 우수 교관 동원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나 본청으로 어려운 경우 지방청 및 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전에 우수 인력을 확보할 필요

□ 본청 교관 동원시 주의점

○ 과거 총조사 경험이 있는 직원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변경되지 않은 과거 조사지침으로 교육하거나 현장 지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 반드시 과거와 현재의 변경사항을 강조하고 각종 게시판에 변경 사항을 비교 수록할 필요가 있음

12> 사이버 교육

평가 및 개선방향

○ 사전교육 이수율이 82.6%로 대부분의 조사원이 집합교육전에 총조사의 개념, 주요용어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교육 효과 제고에 기여

○ 본교육, 사례교육에 대한 높은 접속률을 보면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콘텐츠개발에 필요한 조사지침서 등 조사용품의 적시확보 필요
- 조사표류, 조사지침서, 조사용품 제작시기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후행작업인 콘텐츠개발 지연(1개월)

○ 사이버교육개발에 필요한 전문지식 부족
- 사이버교육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정보의 부족으로 기획단계에서 학습범위, 방법, 대상, 표준교재, 캐릭터 분야와 콘텐츠의 개발범위, 운영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시 시간낭비요인 발생

○ 전문가의 한시적 채용 등 필요한 대책이 요구됨

○ 기획 및 계약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업체의 부담을 줌
- 교육프로그램 운용 및 효과 측정(웹-서비스 및 DB구축)

○ 웹-서비스 회선의 용량부족으로 접속장애 발생
- 초기 확보 용량 100메가

○ 개발업체의 업무공간이 서울이여서 업무협의 등에 애로가 발생

13› 조사용품 제작 및 배부

평가 및 개선방향

❑ 일반적 사항

○ 적정수량 제작 여부

- 일부 조사용품(전수조사표, 기입요령, 비밀보호용봉투, 홍보용전단)은 잔여 물품이 너무 많아 예산낭비의 요인 발생

→ 기입요령, 비밀보호용봉투, 홍보용전단은 조사원들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토록 지도하여 정확한 조사를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소요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제작 수량 축소 필요

○ 시도분산 제작 용품 검수 및 납품 문제

- 조사표 등 5개 품목을 시도분산 제작하였는데 이들 제품의 검수는 제작 샘플을 본청으로 갖고 오게 하였음

- 검수시 같은 원판을 사용하더라도 인쇄기에 따라 색도가 달라지고, 또한 일부 부분이 인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 요망

· 충청,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재인쇄하였고, 대구 지역은 스티커로 조사표를 덧붙이는 등 혼선이 있었음

○ 조사용품 부족분 추가 신청이 1898건으로 추가 배부 업무량이 증가

- 표본조사표, 외국인조사표, 빈집조사표, 가구명부 등 4종은 각 150건 이상 추가 신청 발생

→ 위 조사표류는 조사원이 사용시 훼손을 우려하여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관리 및 배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표본조사표나 외국인조사표는 집단시설가구에서 1부에 여러 명이 사용가능하나, 개별적으로 작성을 희망하여 낭비요인 발생 (향후 1인 조사표와 같이 집단시설용 조사표 검토)

→ 조사용품의 추가 신청이 줄기 위해서는 각 용품별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교육(세부지침 통보)이 필요

○ 조사용품 제작 시기가 촉박하고, 용품 배송업체 선정이 늦음

- 총조사에 소요되는 용품의 정확한 수량은 조사구수 확정 이후에 결정되므로 소요물량 산정이 늦어 용품 발주시기가 늦어짐
- 이에 따라 배부계획이 늦어지게 되어 납품과 배부가 촉박하게 이뤄짐으로써 배송업체의 충실한 배부가 어려워 짐

→ 잠정 조사구수로 용품의 조기 발주가 필요하며, 배부계획 및 업체도 가급적 7월이전에 완료하여 차질없는 배송 필요

○ 조사표

- 전수조사표의 크기가 B4를 초과하여 사용에 불편하고, 또한 조사표 관리실의 보관규격(B4)과 달라 보관에 어려움

❑ 다양한 의견반영을 통한 품질개선과 CI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일관된 이미지의 조사용품 제공으로 원활한 조사수행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이룸

○ CI의 홍보기능에 역점을 둔 조사원가방의 디자인은 조사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재활용률은 높지 않음

⇒ 홍보기능과 재활용률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디자인 모색 필요

○ 조사원연락전(방문안내)을 포스트잇형으로 제작하여 원활한 조사에 기여하였으나 제작비용상승으로 인한 수량부족 발생

⇒ 제작기간이 타 인쇄물에 비해 많이 소요되므로 초기에 충분한 예산과 수량을 확보 요망

○ CI의 조사원휘장 디자인을 금속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의 괴리로 인한 품질관리 문제 발생

⇒ 제작자의 소량의 샘플과 대량의 제품과는 큰 품질차이 발생

⇒ 기술적 문제상 세밀하고 화려한 디자인은 실제구현이 어려움

⇒ 가급적 디자인은 심플한 것이 좋음

⇒ 입찰업체가 실제 제조업체인지 전문입찰업체인지 확인 필요

○ 비밀보호용 봉투의 활용도저하에 따른 잉여량 과다 발생

⇒ 잉여량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우리청의 모든 조사에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식 모색

○ 홍보용 전단 제작시 뒷면을 공면으로 방치

⇒ 조사기간 중 조사내용 홍보부족에 대한 항의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홍보용전단 뒷면 활용을 통해 적극적 대응가능

○ 조사표, 지침서 등 내용확정 지연으로 인한 용품제작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인쇄품질문제 야기

⇒ 인쇄업자간의 조사표 디자인 파일 구현의 기술적 차이로 인한 인쇄오류발생 가능성 상존

⇒ 최종 완성샘플에 대한 철저한 확인 작업 후 생산 지시

⇒ 계약체결 시 확인절차 없이 인쇄업자 임의로 생산하여 발생 모든 책임문제에 대한 문서화 및 강조 필요

○ 2005년 조사원증 및 임명장은 C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련되게 제작

⇒ 하지만 조사원증의 공신력과 품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 필요

○ 외국인조사표 수량산정의 문제발생

⇒ 정확한 수량산정을 위한 자료 부재

⇒ 인쇄배부보다는 출력파일제공을 통한 대응이 경제적

⇒ 대규모 외국인거주예상지역은 통역원 지원

○ 지침서 등 각종 인쇄류 과다에 따른 실효성 재고하여 온라인용 참고자료로의 대체가능성 추진

○ 지침서류 등과 같은 종이류용품 포장단위의 중량문제 발생

⇒ 조사현장의 담당공무원과 조사요원이 대부분 여성임을 고려

⇒ 용품 포장단위에 대한 실측 후 사양서에 요구중량 포함

○ 조사관리 수첩을 활용한 각종 계획서의 통합 모색

○ 답례품 등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확보를 위해 조기준비 착수요망

❑ 일부 품목의 시도 분산제작을 통한 지자체의 다양한 요구반영과 효율적 물품관리 및 제작기간 단축 달성

○ 지역특성항목으로 인한 조사표 및 지침서의 시도별 분산제작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순기능이 있었지만 부족분 발생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이 야기

⇒ 일괄적인 잉여비율의 적용은 대규모 시도와 소규모 시도사이의 절대량에 따라 잉여량의 양극화현상을 가져옴

⇒ 따라서 양극화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잉여비율의 다양화

⇒ 특히 시설조사구의 개인사생활보호의식 강화에 따른 표본조사표 부족문제는 1인용 표본조사표 일부제작 필요성 대두

⇒ 지침서의 경우는 시도용 분리제작이 아닌 통합본이 효율적

❑ 읍면동 단위 및 사용시기별 2단계 포장·배부로 용품수령과 보관에 따른 업무부담 분산으로 신속·정확 및 효율적 물품배송 달성

○ 읍면동 및 용도와 시기에 따른 분리배송으로 체계적 업무수행이 가능했지만 담당공무원의 관심저하에 따른 문제 발생

⇒ 일부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관리부족으로 부족분에 대한 추가배송 과다 발생함에 따라 교육을 통한 물품관리 강조 및 예산배정과 연동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읍면동 포장의 세분화로 인한 잉여량의 과다 산정

⇒ 2010년은 물류담당업체와 계약을 통한 시도별 추가배송 및 부

족분 관리를 위한 보관 장소 확보 필요

⇒ 2010년 계약은 본사(2005년 충청체신청의 실적으로 평가되어 타 지방체신청 담당자들의 의욕상실로 관심저하 및 우정본부내부 통제 미약)와 직접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배송착오에 대한 패널티를 명시

❑ e-census시스템을 통한 전반적 조사관리의 효율성 달성하였으나 계획 대비 미달성부문에 대한 아쉬움 남음

○ 조사원증 및 임명장 자동출력으로 인한 관련 업무부담 경감

○ e-census시스템 완성 지연에 따른 용품관리부문 일부 미흡

⇒ 자동수량산정기능 미완성

⇒ 우체국시스템과 연계한 배송확인기능 미실현

14› 대국민 홍보

평 가

○ 지난 2000인구주택총조사 홍보 평가 결과 전문성 부족, 인력 부족으로 인한 효율적 추진의 한계 등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과감한 홍보예산의 투입 및 민간 홍보전문기법의 도입에 의한 고품질의 홍보 실시

○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홍보전문대행사를 통해 종합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존의 정부 홍보에 대한 선입견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과 의의가 있음

○ 특히, 새로이 도입한 대언론 PR, 온라인 지점 및 이벤트 등 참신하고 톡톡 튀는 크리에이티브는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이고 차별화 된 전문기법으로서 타 부처로부터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음

○ 총조사 인지도를 55.1%(2003. 5월)에서 94.9%(2005. 11월) 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총조사의 성공적 완수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 그러나, 통계의 중요성과 활용도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통계청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홍보활동으로 단 기간에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기는 어려움

○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무관심 등 총조사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기 총조사에도 적정 규모(총조사 예산대비 약 10%)의 예산 투입 필요

○ '통계의 꽃' 이라고 불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더욱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통계에 대한 인식변화와 통계청의 위상 제고를 위해 국민과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유지 필요

○ 다양한 분야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단순화전략 마련 필요

분야별 평가 및 개선방안

□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

1. 홍보예산 편성 추진경과

○ 민간컨설팅, 과거 총조사 평가, 지자체와의 워크숍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홍보 강화의 필요성 제기

○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시 약 2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2004. 3월) 88억원으로 조정(2004. 9월)

○ 국회의 예산심의시(2004. 12월) 홍보분야 예산을 88억원→ 58억원으로 30억원 삭감(이 중 15억원은 일용임금 예산으로 증액)

2. 실행예산 편성

○ 2005 총조사의 열악한 조사환경을 타개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

○ 대중매체 중에서 최대의 광고효과를 나타내는 TV매체 활용 증가

○ IT 인프라의 적극 활용 수단으로서 인터넷,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 이용 불가피

○ 지역 단위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요구

○ 총조사 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방안 추진과정에서 민간 전문업체의 경우 50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참여의사 표명(국내 주요 전문회사 의견)

3. 논 점

○ 국회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삭감하였으나, 집행내역은 국회에 요구한 수준보다 초과 집행

○ 실행예산 대비 초과 집행(추가사업발생 : 차량가두홍보)

□ 홍보대행사 선정

○ 민간홍보대행사(제일기획, 대홍기획, 오리콤 등 6개) 및 방송사(KBS, MBC, SBS, YTN 등)를 방문하여 홍보대행사 선정 및 기타 홍보 등에 논의

○ 개선방향

- KBS 캠페인 광고계약은 당초 KBS미디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하여 제안서에 KBS 부분은 민간홍보대행사 역할에서 제외 했으나 그 규정은 관례적으로 적용되는 KBS 내부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차기에는 홍보대행사에 일괄 위임하여 업무의 중복 배제

□ 캠페인 전략

○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의의, 목적은 물론 통계와 통계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이벤트

○ 추진단계에서는 협조사항이 다양하였으나, 우리청에서 적극지원(공문 작성/접수, 협력기관 방문 등)하여 원활한 홍보활동 추진

○ 꼭 필요한 이벤트인가?, 종류가 너무 많지 않은가? 에 대한 의견 대두(예 : 미스터리 이벤트)

□ TV 매체

○ TV 캠페인 방영 시간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송국의 관행을 깨고 계획 단계에서 MBC, SBS 우수 프로그램에 고정 시간대를 확보

○ 초기 단계에서는 계획 내용의 미실행(불방)사례 발생

○ 캠페인 인만큼 모니터링의 한계 내재

□ 인터넷

○ 기존과 차별화되는 색다른 시도로 포털사 다음(DAUM)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협약식을 통해 온라인 지점을 개설, 네티즌과의 접점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접속을 유도함으로써 총조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

○ 매체 Buying Power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대행사가 우수 광고 게재면(메인 고정 노출과 기타 특수 배너들)을 확보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약 5.5배에 달하는 11억원 물량의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었음. 또한, VOD(Video on demand) 광고 역시 CPM 10,000원이 판매가이나 CPM 5,000원까지 낮출 수 있었음

○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다음 온라인지점의 '뉴스&토픽'에 업데이트 하려 하였으나 여러 대행사들이 컨소시움 형태로 진행된 점과 너무 많은 아이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어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있음

○ 기대만큼 홍보효과는 크지 않았으나, 젊은 계층에게는 여전히 주요한 홍보 수단이므로 차기에는 더욱 강화해야 할 분야임

□ **PR**

○ 우리 청에서 빠른 커뮤니케이션과 적절한 업무 지원을 하여 대행사로 하여금 홍보 실행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케 하였으나 우리 청 내부의 대언론 홍보(PR)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행이 되기까지 많은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밟아야 했음

○ 홍보 운영의 기본 방향은 타 매체를 통한 홍보의 제반사항을 반드시 PR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방향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됨

○ 2005총조사 홍보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PR이었으며, 국가기관 중에서 PR 도입과 보도자료 작성/배포는 우리 청이 처음이라 언론사에서조차 의아해 하였으나 대행사의 지속적인 기자(사회부 및 경제부) 관리와 자료 제공 및 친절한 설명 등이 긍정적인 기사 작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봄

○ 방송사(KBS)와 신문사(중앙일보)를 통해 외국의 센서스 사례와 중요성을 5부작 시리즈로 보도한 기획물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구성안 작성이 미흡하였고,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당 국가 관련 기관 취재 및 인터뷰에 필요한 공문 발송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arrange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음

□ 기 타

○ 홍보수단 개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일부에서는 너무 가짓수가 많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이정도의 홍보수단을 동원 했으니 홍보가 성공적이었다고 함

○ 지자체에 홍보 예산 재배정 후 그 사용내역도 홍보 완료 후 홍보실적 제출 시 같이 받아야 함(국비 예산 및 자체예산을 구분하여)

○ 홍보담당 인력

- 홍보담당인력은 2005. 3월초까지는 정규직 3명, 일용직 2명으로 운영
- 3월 14일 계약직의 지원으로 정규직 3명, 계약직 3명, 일용직 2명으로 운영하였고, 홍보모니터링을 위하여 단순일용직을 4월초 채용하여 운영
- 2005년 홍보인력은 2000년에 비해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 졌으나 6급 기획요원이 1명에 불과해 업무수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대두됨

15› 주택 DB 구축 및 활용

평가 및 개선의견

❑ 법정동과 행정동간 연계 문제

○ 비아파트 정보의 기본자료인 건축물대장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행정동 단위로 구분 곤란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구역 편람」을 이용하여 지번단위의 연계를 검토하였으나 「행정구역 편람」의 완전성에 문제가 많아 이용하지 못했음

⇒ 새주소의 거처, 조사구 및 행정구역 폴리곤을 이용하여 지적도와의 공간조인(spacial join) 및 새주소지도내 행정구역내 지번정보의 캡쳐를 통한 법정동과 행정동간 연계가 바람직

❑ 건축물대장의 호별자료 입수 필요

○ 비아파트부문의 기본자료는 최하위 단위가 층별로 구성되어 있어 연건평 항목의 경우 각가구의 정보와 바로 연결되지 않음

⇒ 건축물대장자료 입수 시 호별정보가 A.I.S.(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내에서 구축 중에 있어 확보가 불가능하였으나 향후 해당 자료 이용시 반드시 확보 필요

❑ 구도심 지역의 건축물대장 정보 신뢰도 문제

○ 신규 개발지구의 자료는 비교적 정확하나 구도심 지역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정도가 떨어짐

⇒ 기준 건축년도를 설정해 기준년도보다 오래된 건물에 대한 정보는 직전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 가구명부 거처 주소 전산화 필요

○ 과거 조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처의 주소정보가 필수적이지만 전산 입력이 돼 있지 않아 자료이용의 한계 존재

○ 주소의 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자료보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해야 함

○ 귀중한 행정자료의 손실 및 동일 거처에 대한 5년 후 거처정보 재조사에 따른 중복 투자 문제와 보안유지에 대한 노력 및 비용문제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득실을 고려한다면 가구명부 거처 주소 입력은 반드시 필요함

❑ 한국감정원 자료 입수 필요

○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기초자료 DB는 아파트 부문에 대해서는 구축이 완료되고 연립주택에 대해 구축중에 있어 아파트 부문의 자료를 신규 아파트 보완자료로서 이용하려 했으나 구입비용의 과다로 포기

○ 한국감정원의 자료는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정도가 높고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필수적으로 입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관간 협의를 통해 자료의 무상제공을 유도해야 함

16› 080 콜센터

평 가

1. 과거 총조사와 비교하여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상담원을 대폭 증원하여 100명의 상담원으로 각종 질의 조회 및 민원을 처리

2. 인력운영상의 문제점

□ 상담원 인력 운영

○ 상담원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주 5일 근무로 2일간의 휴무를 실시하다보니 실제 2교대 운영이라도 각 조별 50명이 안되는 경우 발생

○ 상담원 규모 설정시 실제 운영할 것을 감안하여 규모 설정 필요

□ 2교대, 3교대 운영의 탄력성 적용 필요

○ 2교대 운영을 할려고 했으나, 전화량 등을 감안하여 시간대별 출근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초기에 혼선

- 매 시간별 10명씩 출근하고 8시간 근무 후 퇴근

□ 통계청 인력 운영

○ 분야별 상담을 위하여 파트별 1명이상의 직원을 차출하였으나 실제 전환되는 전화량이 많아 분야별 전환이 불가하여 무작위로 전환되어 분야별 상담 불가

○ 상담기간 동안 특정 직원만 고정 배치되어 해당 직원의 불만

□ 상담원의 통일된 답변

○ 현장 경험없이 단기간의 교육으로 상담원을 배양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위에 지적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통일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음

3. 상담원 교육

□ 교육 기간 부족

○ 5일 교육에 5일 실습이었으나, 교육 내용이 현장감이 없어 실제 상담 시 한계성

□ 현장 실습 필요

○ 가능하다면 시범예행조사부터 상담원을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현장 실습을 하도록하는 방안 필요

4. 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 재검토

□ 상담프로그램의 활용도가 실제보다 크게 미흡

○ 상담 이력을 관리하여 분야별 상담건수를 파악하는 부분이 전화량이 많아 상담내용을 체크하거나 기록할 시간이 없었음

5. 상담 내용에 대한 사후 분석

□ 총조사 후 상담내용에 대한 세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하나 녹취 자료만 있고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지 않음

□ 일자별 시간별 통화량에 대한 분석도 실시되지 않았음

6. 각종 지시사항의 전달 체계

□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전달사항이 080에 전달되지 않아 상담실에서는 다른 응답을 하는 혼선 발생

7. 080상담 업무의 과소 평가

□ 080상담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없어 일관된 작업 처리가 안된 점이 아쉬웠으며

□ 특히, 각종 질의 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한데 4~5급의 관리

자급이 없어 답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답변하지 못해 추가 민원이 발생

8. 080상담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 상담실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해당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관련자(또는 부서)에 연락만하고 종료되어 결과 확인 불가

사례) 경기도 성남시의 인구 오류의 경우 사전에 상담실에 접수되어 실사기간인가 읍면동 내검기간 하여튼 그 기간중 통계청 책임자에게 연락하였으나 결과 보고 없었고 확인도 해보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9. 통일된 답변 및 지침 전달

□ 지침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 및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 지침서(각종 제품의 사용설명서처럼)를 작성하여 비치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향

1. 현장 실습

□ 향후 각종 시험조사 특히, 시범예행조사에서 상담원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여 실제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 불가할 경우 교육기간 중에 현장 실습 기간을 설정하여 적용

2. 상담인력 운영

□ 주 5일 근무로 인한 휴일 2일를 위하여 필요인원의 10% 정도 추가

□ 특정 시간대에 전화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감안 2교대, 3교대가 아닌 시간대별 출근 인원 조정 방안을 사전에 수립 세부적인 배치 필요

3. 통계청 인력 운영

□ 대부분의 전화가 민원성 전화로 이를 받아 처리하는 직원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므로 통계청 인력의 원활한 순환 근무 필요

○ 특정 인력만 가동하지 말고 전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편성

○ 특히, 책임자급인 4~5급 관리자가 없어 전반적인 통제가 어려웠는데 책임자를 고정 배치

4. 체계적인 연락체계 필요

□ 각종 민원 접수시 관계자에 연락만 할 뿐아니라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별도의 상황판(??)을 작성하여 접수, 관계자, 처리일시, 처리결과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체계 수립

5. 세부적인 매뉴얼 작성

□ 현재까지의 각종 사례를 정리하여 예외적인 특이 사례까지 망라하여 세부적인 지침서를 내부용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시험조사에 적용하면서 세부적으로 다듬어 2010년까지 완성한다면 통일된 상담 뿐만아니라 지자체별 업무 혼선없이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7› 인터넷 조사

평 가

❑ 준비기간 부족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인터넷조사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음

○ 조사기간중 서버, 네트웍 등 시스템 장애 없이 무정지로 운영

○ 조사신청 및 입력에 대한 현황을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 조사기간중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웹상에서 즉시 파악하여 반영

○ 웹, SMS 및 e-mail를 활용한 전달사항 안내 및 전파

○ 향후 인터넷조사 발전에 많은 시사점 제공

❑ 그러나, 준비 및 실시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많이 발견됨

○ 주소db 일부지역 미구축 및 불완전성으로 신청자의 38% 정도는 조사구번호 수동부여에 따라 신청후 24시간후에 조사표 입력 가능

- 주소db는 새주소 자료가 확보된 도시지역 위주로 구축되었으나, 이것도 자료의 성격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아 본격적인 구축은 7월 이후에나 가능하였음

- 이에 따라 신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일부 신청자의 경우 신청을 취소하거나 조사표 입력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발생

- 이들 가구 중 일부는 인터넷조사를 신청만 한 것을 조사표 입력까지 완료한 것으로 오해한 경우도 발생(화면에 안내문은 있었으나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준비기간 부족에 따라 시스템 구축후 충분한 검증기간을 거치지 못함에 따라 일부 사용자의 불편 초래

- 사양이 낮거나 별도의 방화벽을 가진 일부 응답자의 PC가 갑자기 down되는 경우 발생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자료의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만 홍보를 실시하여 참여도는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함

- 시스템 개발과 전산환경 구축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에 비해 일반국민의 참여도는 당초예상에 못 미침

○ 인터넷 응답가구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면접조사로 불만 발생

- 인터넷 신청 및 입력현황은 읍면동 총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시스템 관리화면으로 조회하여 조사원에게 알려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 인터넷 신청가구 처리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조사원의 경우에 관리가 복잡하다는 생각으로 면접조사로 마무리 하려는 현상도 발생

- 시스템 사용권한이 읍면동 공무원과 총관리자로 제한하였고,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진했던 것도 한 원인임

○ 실제 인터넷조사에 참여한 가구 중에는 당초 주된 대상층 이외의 가구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 참여가구중 1인가구가 20.5%로 전체가구의 1인가구(20.0%)와 비슷하고, 아파트 거주가구는 66.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요원도 인터넷조사의 업무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로 참여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판단됨

- 당초 실시 대상이 아닌 기숙사 등 집단가구에서 입력한 경우도 있었으나, 시스템적으로 제외하지 못함

○ 인터넷조사로 응답한 가구자료의 오류 확인 및 보완하는데 어려움

-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개발 예정지역에서 인터넷조사에 참여 하는 경우에 처리가 곤란(실제 거주지역에서 불응 가능성 높음)

- 비혈연 및 집단가구의 경우에 동거가구원은 입력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만 입력한 사례 발생

- 인터넷조사로 응답한 가구의 자료를 조사기간중 조회 및 보완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후 시군구 및 사무소 내검시 많은 애로 발생

○ 신청 및 입력화면에서 이용자 불편사항이 발견

- 신청화면에서 주소입력 콤보박스에서 깜박거림이 발생하고, 일부 주소db 구축지역에서 이용자 오류로 수동으로 입력한 경우에 이를 체크 못함

- 가구 및 주택사항 입력화면의 지나치게 세분되어 이용자 불편

- 조사표 입력 완료후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화면)가 없었음

- 화면단위에서 다양한 안내문을 제공하였으나, 주요 문구의 강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효과가 떨어짐

개선방향

❑ 인터넷조사 실시계획의 조기 수립 및 시스템 구축으로 시험조사시부터 충분히 검증후 본조사에 적용 필요

○ 인터넷조사 목적, 조사 시기, 주된 대상층 및 지역, 적정 실시규모, 실시방법 등 실시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철저한 대비 필요

- 조사원 면접이 어려운 취약지역보다는 DB구축 및 내용보완이 용이한 아파트 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하거나,

- 사전 신청자에 한해 실시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청자가 많은 지역에서 조사비용을 절감하여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 사전 신청을 받을 경우에 총조사에 대한 홍보효과도 유발 가능

- 응답이 용이한 전수조사 대상가구에만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 인터넷조사 실시방법 등의 결정시 종이조사표 처리방법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

- 2005년의 경우에 일반조사표를 웹기반으로 입력함에 따라 인터넷조사를 위한 서버 등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없었음

○ 구축된 시스템은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시 반드시 검증 및 보완

- 시범예행조사시에는 실제 본조사와 동일한 환경으로 적용하여 문제점을 최대한 도출

❑ 신청 및 입력화면은 응답자 친화적으로 설계

○ 신청시 주소입력은 지도를 클릭하여 입력하는 방법도 함께 제공 고려

○ 입력화면 설계시 입력부담과 응답자의 친밀감도 고려하여 조사표 입력시 주택DB 자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조사표 입력후 입력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

○ 화면당 항목배치는 응답자의 편리함과 서버의 부담을 함께 고려

○ 화면상 안내문은 글자 색상과 크기를 고려하고, 그림 등도 활용

❑ 신청 및 입력가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사용자 매뉴얼을 사전에 만들어 관계 공무원 등 사용자에 대한 교육 강화하고, 사이버 교육 등의 도입으로 자기학습 지원

○ 인터넷조사에 따른 중복,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에 적용

- 중복 및 누락은 가구단위는 물론 가구원 단위도 고려

○ 신청자의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간 이동 관리가 용이하게 설계

18› e-census 개발 및 운영

평 가

❑ IT 인프라의 적극 활용한 「e-census」 실시로 조사준비, 실사, 자료처리 등 조사전반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음

○ 인터넷조사 도입으로 취약계층의 누락을 방지함은 물론 차기 인터넷 조사에 대비한 다양한 경험 축척

○ 현지 웹기반으로 조사표 입력 및 내검을 실시하여 자료검토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 최종결과 공표시기 단축

○ 사이버 교육을 통한 조사원 사전학습으로 조사원 교육 효과 제고

○ 온라인으로 조사·인력을 관리하여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하였으며, 각종 행정서식 출력으로 업무량 크게 축소

❑ 그러나, 준비 및 실시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발견됨

○ 웹 입력 및 내검의 경우 현지 입력환경 구축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였고, 일부 기능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함

-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시 입력부문위주의 검토진행으로 내검 및 집계 단계에서의 문제점 발굴 소홀

- 현지 입력 장소, 장비 등 입력환경 구축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확보 PC중 저사양인 경우에 화면처리속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 발생

- 일부 입력장소에서 네트웍장비 불량 등으로 업무처리가 일시중단되었고, 시군구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입력장소도 다수 변경

- 일부 시군구에서 시스템을 통한 입력내검원 채용관리, 업무량배정 등

입력내검을 위한 사전준비 지연 및 오류 발생

- 인터넷조사 및 ICR 입력 자료와 통합시 일부 항목 코드 불일치 발생
- Key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계청에서만 처리함에 따라 업무 부하로 인한 처리 지연
- 시군구 및 사무소 단위에서 DB불일치 등 기본사항, 읍면동 및 조사구 단위 거처의 종류, 지역난방 등 오류 검출 화면 없었음

○ 온라인 조사·인력 관리의 경우 준비기간 부족으로 시스템 개발이 늦어져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검증 부족

-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2005년에 진행되어 실질적인 시험 및 시범 운영을 하지 못하고 바로 실제 적용
- 사용자에 대한 사전교육 부족으로 조사 및 인력 관리시 잘못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음
- 운영기간중 화면이나 기능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등 사용자의 많은 불편 초래
- 화면설계시 관리 위주의 기능이 우선시됨에 따라 필요에 의한 지자체 사용자의 능동적 참여가 떨어졌음
- 조사원증 등은 프린터 설정 및 사양에 따라 출력시 오류 발생

○ e-Census 홈페이지를 통한 Q/A 응답, SMS 발송, 집계시스템 등도 개선이 필요함

- Q/A를 통한 질의 건수 과다발생으로 답변의 적시성이 떨어짐
- SMS 발송권한을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에도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오발송 사고도 발생
- 결과표 확정 지연으로 집계시스템의 개발이 늦어져 수준 점검시 집계시스템의 활용이 떨어졌고, KOSIS 수록도 지연됨

개선방향

❑ 자료처리방식 조기 확정으로 시스템 구축 및 검증 철저

○ 자료처리방식을 조기에 확정하여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시 검증

○ 사용자 매뉴얼에 의한 업무담당자의 사전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잦은 업무담당자 교체를 대비하여 자기학습교재 준비

❑ 웹기반 입력 및 내검방식으로 자료처리시 현지 입력환경 구축에 보다 많은 준비 필요

○ PC, 네트웍 장비 등 현지 입력장비 등은 가급적 통계청 주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동일사양으로 확보

- 시스템 구축시는 저사양 PC도 화면처리속도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

19> 통신시설 계약 및 운영

평 가

4개 업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최소 2~3명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 협의에 따른 소요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1명이 타 업무를 병행하면서 처리하였으므로 업무 효율성 및 예산 절감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 허나, 별 문제없이 처리됨에 따라 효율성 및 예산 절감 효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대단히 과소 평가되고 있음

1. 업무의 효율성 도모

□ 지자체 업무 부담 경감

○ 총조사에 수반되는 각종 통신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업무를 중앙에서 일괄처리하여 지자체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

□ 일괄 발주 및 집행에 따라 4회의 행정처리를 1회로 단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 통신시설 장애시 효율적인 업무 추진

○ KT에서 통계청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과거 지자체 자체 보수인력 및 해당 업체 연락 등으로 인한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

2.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절감

□ 각종 설치비 및 사용료를 일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단가를 대폭 인하하여 예산을 절감

□ 과거 총조사 마다 연말 통화료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에서 일괄 집행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

3. KT를 통한 홍보 효과

□ KT와의 협약식을 통한 언론 홍보 및 수만명의 KT직원에게 총조사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여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4. 기타 사항

□ 공기업인 KT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관단 교육시 KT의 시설 및 기자재를 저렴하게 이용

□ 2005년 처음 도입된 web입력 방식에 KT의 VPN망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인터넷 회선 관리 및 보안 문제를 일괄 해결

[문제점]

1. KT 자체도 전국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전국조직을 움직인 사례가 거의 없어 일부 지역에서 통신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2. KT에서 4개분야의 사업이 개별적으로나 소규모로는 진행되었으나 대규모로 진행된 경우가 없어 KT에서 소요예산 산정시 사소한 부분을 상당부분 누락시켜 상당액(2억여원)을 손해본 것으로 나타남

사례) 2004년 7월 1일로 주5일 근무가 도입됨에 따라 080상담원 및 통신시설원의 주말 설치시 초과근무 지급분이 고려되지 않음

개선방향

1. 통합 발주는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2. 처음 도입된 사례이고 공기업이라는 명목으로 KT에 상당한 부분의 불

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요된 부분이 많아 향후에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 절감도 좋지만 해당 업체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3. 통합 운영이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조사현장에서 일부 혼동이 있었음

□ 통합운영에 따른 내용을 시군구 통계담당직원 워크샵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2005년도에 기회는 있었으나 타 업무 설명에 밀려서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으며 유인물로 대체하여 통계담당직원에게 충분한 인식이 안됨

20› 예산 집행

평 가

1. 실행 예산 편성 후 필요 시기에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향후 예측이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집행 불가능 함

2. 전체적인 예산 집행을 행정파트에서 관리하여 그나마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향후에도 예산 확보와 달리 실행 및 집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고정 인력 배치 필요
   ○ 각 파트별 집행되는 예산이 계약되는 경우만 파악이 가능하고 이 또한 계약서를 보아야 하므로 전체적인 집행 파악이 어려움
   ○ 선급과 잔금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선급만으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필요

3. 집행시 보험료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가 늦어 중앙에서 일괄 집행(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등)이 안된 것은 상당히 아쉬운 것으로 향후 일괄 집행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음

4. 연초에 자체 절감액을 설정하여 이를 제외하고 실행예산을 세워 집행하는데 10월경 강제적으로 절감액을 사용하라는 압력으로 이를 집행하는 모순 발생
   ○ 사전에 협의도 없이 10월경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어떻게 할 방안이 거의 없어 지자체 및 사무소에 강제 배정하였는데 후에 이를 두고 큰 말은 없었지만 불만요인으로 작용

5. 총조사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배정시 기초자료 산정이 늦어지거나 제때 작성되지 않아 기초자료 작성, 예산 산정 및 배정을 1인이 하다보니 필요시기에 맞춰 배정하기 바쁘고, 오류 발생

○ 지자체 교관단 교육 참석여비 2번 배정 등
○ 또한, 080상담업무까지 수행하여 080상담실에서 11시까지 근무하고 새벽에 들어와 예산 배정을 하다보니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었음

6. 세목 구분 없이 예산 배정하는 경우에 대한 검토 필요
○ 예산 관리를 목별로 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세목별로 관리되면 추후 자료 작성시 세목 자료 필요
○ 실제 지자체별 필요 세목이 다르므로 통일된 기준으로 이를 만족할 수 없으므로 목별 배정이 좋으나 추후 결산 등에서 자료 작성이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필요

7. 총조사와 관련된 지자체 예산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 설명 및 의견 수렴 필요
○ 지자체 총조사 담당자가 예산을 같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 그들에 대하여 업무 설명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경리 및 용도계에 대한 업무 설명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8. 특별조사구의 예산 집행 관련
○ 특별조사구에 대한 예산도 상당 규모 있으나 이를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

개선방안

1. 예산 편성에 언급하였듯이 실행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여 이를 시도에 조기 통보 필요
○ 적어도 1/4분기 이내에는 통보할 필요가 있음
○ 조기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대략적으로 약 70%정도의 예산을 우선 통보 및 배정하고 추후 30%을 정산 형식으로 배정하여 지자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분기별로 배정액을 통보할 필요 있음

○ 특별조사구에 대한 예산도 실행예산 편성과 동시에 같이 작업하여 해당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집행 도모 필요

2. 지자체별 필요 예산이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 적용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지자체별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실행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정하여 배정
   ○ 전년 연말이나 당해연도 연초에 지자체별 소요예산을 파악한 후 실행예산을 편성하거나 실행예산 초안을 우선 시도에 통보하여 수정안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는 향후 결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체 필요 예산을 확보하게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임

3. 총조사는 지자체 총조사 담당자가 예산을 같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 그들에 대하여 업무 설명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경리 및 용도계에 대한 업무 설명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권역별 설명회 등 각종 현지 행사에 이들을 참석시켜 업무에 대한 이행 증진 도모
   ○ 같이 하기 힘들면 예산관련자만 별도로 소집하여 설명

4.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예산 총괄자가 지정되어 파트별 각자 소요예산 및 집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예산 총괄자 이외에도 기획파트에 예산 전담 인력을 두어 실행예산 편성 및 배정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5. 각종 보험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지자체의 편의를 위한 각종 행정처리 방안 및 기준설정 등을 마련하여 통일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향후 시험조사시 해당 공단과 협의하면서 조율할 필요 있음

21› 조사추진

평 가

❑ 총평

○ 사전 계획대로 조사 기간내 대부분 조사가 완료 되었으며, 과거 조사에 비해 보다 내실있는 준비가 됨

○ 정확한 조사실시를 위한 분야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

○ 특히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누락과 중복의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분야별 주요 평가

○ 휴일 근무서한 발송 :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휴일근무 서한을 별도로 발송하여 일선 읍면동 관심 촉구 및 관련 공무원 배려 협조

○ 각급 행정기관, 시설에 협조 공문 발송 :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의 당위성 및 협조 당부

- 특히 일선 경찰서에 애로 지역에서 조사요원의 협조가 있을 경우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속 경찰관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

○ 준비조사 관련 지침 시달 : 준비조사 기간 동안에 반드시 조치해야 될 주요사항을 긴급하게 시달

○ 노숙자 조사 지침 시달 : 노숙자 조사를 최대한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사 지침 시달

○ 추가조사 실시 : 조사 대상지역의 조사가 부재, 불응 등으로 조사가 곤란했던 지역을 별도로 선정하여 추가 조사 실시로 완전성 및 정확도 제고

○ 취약지구(특별관리지역) : 별도의 관리로 조사의 정확도 제고

❑ 누락과 중복을 위한 개선내용

[조사기획 단계의 개선]

○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 5차례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조사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개선

○ 조사표 개선

⇒ 조사표 작성 시작단계에서 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사람과 포함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우선 조사토록 조사표 설계

○ 수치지도 활용

⇒ 지리정보체계(GIS)에 의한 수치지도(조사구요도) 제작 및 활용으로 조사구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줌으로써 누락과 중복 방지

○ 행정자료의 적극 활용

⇒ 주택DB 자료(건설교통부), 외국인 등록자료(법무부), 고아원 및 양로원 등 사회시설(보건복지부) 자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종교단체), 학교 기숙시설 명부자료, 호텔 명부자료 및 노숙자 연합 명부자료 등 행정자료를 확보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함으로써 누락을 최소화

○ 표준 교육제도 도입

⇒ 표준교안 및 사이버 교재 등 표준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교관간의 개인차에서 발생하는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

○ 취약 지역 특별관리

⇒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의 중복, 누락 가능성이 많은 취약지역의 유형 및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 할 수 있는 조직 구축(수도권 취약지구관리팀 구성)

[자료수집 단계의 개선]

○ 준비조사와 본조사 구분

⇒ 준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준비조사 기간에 거처 및 가구수의 정확한 파악

○ 본조사시 실사지도 및 조사지원으로 2원화 관리

⇒ 본조사 조사현장 관리시 통계청(본청)은 실사지도 중심으로, 지방청

(사무소)은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지원으로 2원화하여 조사 누락의 최대한 방지 및 정확도 제고

○ 인터넷조사 실시

⇒ 인터넷 조사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누락 가능성이 높은 1인 및 맞벌이 가구, 학교 및 공단 주변 원룸 밀집지역,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응답자의 참여방법을 다양화하여 누락을 최소화

○ 온라인 조사관리

⇒ 정확한 현장조사 지원, 실지조사 및 내검 등 효율적인 관리

○ 080 콜센터 운영

⇒ 통일된 조사지침 시달 및 일관된 답변을 통한 조사현장의 문제점 해결

○ 대국민 홍보 대폭 강화

⇒ 홍보효과가 큰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활용을 강화하고 인터넷, 이벤트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

[자료처리 단계의 개선]

○ 웹기반을 통한 현지 입력내검 실시

⇒ 현지에서 분산 입력 및 내검으로 자료 검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료처리 기간 단축

○ 내검 및 코딩작업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산업, 직업의 자동코딩 시스템의 활용, 오류 및 무응답 항목에 대한 Imputation 기법 적용 등 통계적인 기법 활용

❑ 아쉬웠던점

○ 조사 기간 초기(11.2) 사무관 및 6급 이하 승진심사의 실시로 본조사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인사위원 모두가 출장기간이었음에도 출근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함

○ 본조사 기간중 e-census 시스템 활용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으나, 일부 조사 진도 관리, 조사요원 교체율 등 진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음

○ 본조사 기간 실시 본부 전화 폭주로 주요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 발생

개선방안

○ 인사 관련 부서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아 향후 조사시 사전에 업무추진일정을 공개하여 간부들의 솔선수범 및 협조 유도 필요

○ e-census 시스템의 시험조사 및 시험예행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전 연습과 지방자치단체(특히 시군구)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방안 강구

○ 본조사 기간에 실시 본부 전화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080 콜센터의 전화회선 증설이 필요함

22> 특별조사구

평가 및 개선방안

○ 특별조사구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게 되므로 관련 부처에 담당자가 없으며, 조사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림

- 2005년에는 2월에 관련부처 조사협조를 위한 방문, 4월에 관계기관 담당자 회의를 실시
- 초기에는 6개부처 모두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접촉창구 찾기 등 조사준비가 상당히 어려웠음
- 4월 담당자 회의 이후 2차 관계기관회의는 9.30일 실시되었는데, 2차 회의(조사지침교육 등)가 너무 늦어 이후 일정추진에 애로가 있었음

○ 부처별 담당자가 해야 할 일, 특히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해 생소한 경우가 많아 조사 추진시 상당한 혼란 발생

-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는 경우 조사담당자와는 별도로 예산 담당자(회계직 공무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조사담당자는 예산집행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발생
- 특히 국방부와 같이 규모가 큰 경우는 우리가 집행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절차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
- 각 부처 담당자 회의시 총무과(경리) 담당자가 회의에 같이 참석하여 예산 집행의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를 미리 일러 주는 것이 필요

○ 부처별 조사담당자 교육을 각 부처별로 전달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전달과정에서의 착오 등으로 조사지침의 상당한 혼란 발생

- 조사담당자 교육시 최소한 본부 소집교육은 인구조사과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지침상 혼란을 방지

23> 조사표 정리. 입력 및 내검

평 가

❑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자료처리로 결과 공표시기 단축 등 자료처리 발전에 전기를 마련

○ 인터넷망을 활용한 입력 및 내검, 관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실시간 개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유지

○ 산업/직업 자동코딩시스템, 무응답처리에 Imputation 기법 적용

○ DB방식의 자료 관리로 자료의 활용성 및 정확성을 높임

❑ 그러나, 주된 자료처리방식의 결정지연 등 사전대비가 일부부문에서 부족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

○ 주된 자료처리방식이 2004년에나 결정되었고, 시스템도 시범예행조사 이후 구축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

- 웹, 인터넷조사 및 ICR로 입력된 자료의 통합관리에 대한 검토 부족

○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시 입력, 내검 및 집계 등 자료처리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부족

- 사전에 내검 및 집계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이치의 범주와 개별 처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음

- 주택의 종류 등 특이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지침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고 발생시 극소수 업무담당자의 판단으로 처리

○ 내검 단계별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구체적 지침이 없었음

- 특히, 부재불응가구의 경우에 조사, 조사표 정리 및 내검 단계에서 개념이 일부 변경되었고, 일관된 처리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함

○ 자료처리전담 파트가 1차 내검이 완료된 이후에 신설되어 조사준비, 본조사, 입력단계에서 자료처리부분의 고려가 미흡

-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시 자료처리부문에 대한 고려 부족하여 집단시설가구 및 외국인가구 처리시 많은 애로

○ 시스템 설계시 위기관리화면 설계 미흡

- 입력·내검 실적, 오류코드별 잔여 건수 등 기본적인 진행사항은 집계 가능하였으나,

- DB불일치, 연관항목별 특이치 관리화면 등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관리 화면이 불명확하거나 산재되어 있었음

❑ ok로 처리된 오류에 대한 재확인 작업에 많은 시간 소요

○ ok 처리는 범위로 설정한 오류코드에 해당되었지만 재확인 결과 사실인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불응, 무응답 등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 경우가 많아 ok 처리에 대한 재확인 작업에 많은 시간 소요

개선방향

❑ 자료처리 일정이 2000년에 비해 4-6개월 앞당겨져 내용검토를 중심으로한 자료처리에 절대적 시간 부족 경험

○ E-census 시스템 도입 및 전산기기 발전 등을 고려하여 공표일정을 2000년에 비해 4-6개월 앞당겨 조정하였으나

○ 오류자료 점검, 결과표 수준 점검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여 2000년 수준의 공표 일정으로 재조정 필요

❑ 자료처리방식의 조기에 결정하여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시 충분히 검증

○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시 입력, 내검 및 집계 등 자료처리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내검 단계별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구체적 지침 마련 필요

○ 자료처리전담 파트를 조사준비 단계부터 운영

○ 시스템 설계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위기관리화면 개발

❑ ok 처리방법에 대해 교육 강화

○ ok 처리는 최초 ok 확정시 처리의 정확성이 확보된다면 향후 내검에서 추가확인 작업의 생략이 가능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감될 수 있음

○ 따라서 내검원에 대한 ok처리 방법 교육시 많은 지면 할애와 함께 예제를 통한 집중 교육이 필요함

❑ 임차료 항목의 허용범위 산정

○ 임차료는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5년의 시차로 인해 과거 조사자료의 분포를 이용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항목임

○ 타 기관(국민은행)의 임차료에 관한 최근자료를 이용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서울 강남지역, 수도권 신도시 지역 등 특이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입력프로그램내 내검기능 추가

○ 2005년 총조사에서는 입력 속도를 우선 고려하여 입력시 내검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배제하였으나

○ 입력 속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나이별로 조사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 등 기초적인 내검기능을 추가하여 향후 자료처리 기간의 단축 가능

24> 잠정결과 공표

평 가

❑ **결과공표 예정일 준수로 최종결과 공표 이전까지 조기 이용자를 위한 결과 제공**

○ 읍면동 조사표류 정리기간중 입력한 가구명부 자료 중심으로 시군구 입력내검 기간중 입력한 외국인 및 빈집조사표 자료, 특별조사구 자료를 통하여 순조롭게 집계

○ 전산집계 시스템도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음

❑ **아쉬웠던점**

○ 최근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이용하고, 잠정집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음

○ 특별조사구 자료의 경우 행정구역(법정동, 행정동)의 불일치, 영내외 거주자 구분 등 자료집계에 애로 발생

○ 외국인의 경우 3개월 미만 거주자 구분, 빈집조사표의 경우 폐가 구분 등의 자료 처리 및 집계가 기간내에 어려웠음

○ 조사 년도내 잠정결과 공표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간이 다소 부족함

개선방안

○ 향후 행정자료 활용, 특별조사구 자료 정도 제고 등을 위한 법정동과 행정동을 연계할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개발을 검토해야 할것임

○ 외국인 자료, 빈집 조사표 자료 및 특별조사구 자료의 효율적인 결과 집계 방안의 검토가 필요

25› 각종 회의 및 워크숍

평 가

❑ 직원 사전준비 워크숍(2003. 3월, 5월, 12월 3회 실시)

○ 과거 총조사 유경험자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분야별 토론과제를 선정·발표하여 인구조사과 직원의 전문지식 함양

○ 조사 실시 경험을 공유, 의견교환, 우수사례 발굴,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

○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

❑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평가 워크숍(2004.12. 2~12. 3)

○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에 대한 종합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층적인 토의가 이루어짐

○ 향후 본조사의 원할한 업무추진 능력 배양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지식 함양

○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혁신적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로 조사환경에 적극 대응

❑ 2004년 통계조사 유공자 워크숍(2005.1.14~1.15)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업무설명 및 토론 등으로 대화의 장 마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취약한 조사환경 극복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 시도 통계담당과장 및 실무자 회의(2005.3.17~3.18)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시행 계획(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의 계기 마련

○ 실시기관에 대한 동기부여 및 성공적 실시를 위한 협조사항 전달

❑ **종합시행계획(안) 통계위원회(2005.3.24)**

○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종합시행계획(안)을 통계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고견을 듣고 좋은 의견을 구함

○ 실시본부의 발족,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실시 등으로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하여 완벽한 준비에 노력함

❑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2005.3.29)**

○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통계청 실시본부 현판식 실시

○ 본격적인 조사 추진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의 요약설명 및 실시기관 협조사항 전달

❑ **실시본부 수도권관리부 회의(2005.10.20)**

○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 취약지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수도권 관리부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 수립

○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지원 및 대응방안 마련

❑ **시도 통계담당 및 실무자 회의(2005.11.24~11.25)**

○ 본조사 추진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종합토론의 장 마련

○ 잠정결과 공표, 입력내검 등 향후 업무추진 관련사항 전달 및 성공적 마무리 협조

❑ **종합평가 워크숍**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내용 종합정리

○ 추진과정상 잘된점,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등 향후 참고자료 활용

개선방안

○ 상기의 각종 워크숍, 회의 뿐만 아니라, 권역별 설명회 4회 개최, 교관단 교육 4회 개최 등 숨막히는 행사 일정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인 조사 실시의 기틀을 마련

- 그러나 이러한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담당직원의 에너지 낭비가 너무 많으므로 용역이나 아웃소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청(사무소)과 시군구의 직원간 상호 의견교환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서 본조사 시 협력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함

○ 이러한 성공적인 조사 기반을 마련하고도 통계청 차장의 참석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

26› 사무공간 및 전산장비 확보

평 가

❑ 총평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이전 입력내검 관련 업무는 통계정보국(정보화기획과) 소관이었으나, 시군구를 통한 400여 입력내검 장소 및 입력장비 확보를 위하여 조사 주관부서인 인구조사과에서 사업 추진

○ 과거 전례가 없는 방식의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부족으로 업무추진 과정상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함

○ 본조사 추진이후 입력 내검 실시 초기 단계에서도 내검용 PC 지원을 요구하는 시군구가 상당수 존재

○ 시군구에서 입력내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령의 검토도 없이 업무가 추진되었으며, 일부 시군구에서는 왜 이러한 업무를 시군구에서 해야 하느냐고 항의 및 반발하는 경우도 발생

○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큰 무리없이 사무공간 및 전산장비 확보업무가 마무리 됨

❑ 읍면동 사무공간 확보

○ 초기에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조사 시기가 임박해 옴에 따라 통계청의 지속적인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대부분 확보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사무소 회의실 및 부대시설 등 활용

❑ 입력내검 장소

○ 전산교육장, 여성회관, 학교 및 복지시설 등을 확보하여 활용하였으며, 입력내검용 인터넷 회선 설치 시기까지 입력장소의 변경을 요청하는 일부 시군구도 발생

- 일부 시군구에서는 통계업무가 주요 지자체 업무의 우선순위에 밀려 입력내검 장소 확보 공간도 바뀌는 현상이 발생

❑ 입력내검 PC

○ 입력내검은 원칙적으로 시군구 1개 장소에서 실시하고, 인구규모가 큰지역은 2~3곳으로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읍면동 몇곳을 묶어 실시한곳도 있음

○ PC 임차 계획 수립단계에서 83%내외의 장비 확보율을 보였으나 인터넷 회선 연결 및 입력 초기 단계에 긴급 지원 요청 지역 발생

- 통계청의 PC 확보 독려로 인하여 무리하게 중고 제품을 확보한 지역에서는 주로 발생

❑ 기타

○ 인터넷 회선 설치시 문제발생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통신시설 관리 부서와 통계 부서가 달라 업무 협의에 혼선이 발생
- 지자체 업무 설명시 통신 부서 직원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개선방안

○ 향후 총조사시 자료처리 방식 및 입력내검 방식 결정시 시군구 입력내검 방식은 권장할 사항이 못됨

- 특히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 인력의 행정낭비가 심함

○ 동일한 방법을 향후 총조사를 추진한다면 본조사 사업년도 한해 전에 치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미리 협조공문 발송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협조요청 필요

27> 표준교안

평가 및 개선방안

1. 도입 의의

○ 조사지침서의 내용을 모든 조사요원에게 동질적으로 전달

- 교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개인차에 의한 비표본오차의 최소화

2. 평가

○ 표준교안에 제시된 교육내용과 순서에 따름으로 종전보다 통일된 내용의 전달범위가 확대되었음

○ 교관에 대한 교육준비 지원

- 표준교육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한 만큼 초기단계에서는 부담이 있었으나 2회차 이상에서는 교육부담을 경감하였음

28› 사후 조사

평 가

1. 총조사

가. 완전성 및 정확성

○ 2005년 총조사의 오차율은 3.88%로 2000년 5.04% 보다 낮아져, 과거 조사에 비해 금번 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누락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중복율**은 1.49%로 95년 1.81%, 2000년 1.74%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특히 실제 없는 사람을 가공(架空)으로 조사하거나 주민등록부을 참고한 탁상조사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조사구 설정 당시의 가구수를 맞추기 위한 가공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 조사구 설정 당시 실제 가구수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누락율**은 2.39%로 2000년 3.30%에 비해 낮아졌는데 이는 면접하기 어려운 1인 가구와 한 거처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등의 확인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 누락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홍보 효과 및 지역 사정에 밝은 총관리자, 조사관리자를 체계적으로 잘 운영한 결과로 보임

○ 고 연령층에서의 부합율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으로는 10세 간격 또는 띠 간격에 의한 기억 착오와 총조사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생일로 응답을 하고 사후조사에서는 실제로 세는 생일로 응답을 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과 질문자가 정확한 응답을 유도할수 있도록 질문방법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가구주와의 관계 부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구주와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적합한 응답자 선정이 필요

○ 혼인상태별 부합율에서는 이혼이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을 많이 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사자의 질문방법에 대한 대책 강구(특히 읍면부지역)

나. 누락 가구 및 가구원

○ 누락자의 누락사유를 보면 「세든 가구 누락」,「거처 누락으로 인한 누락」, 「방문하지 않았거나 응답자를 만나지 못한 누락」, 「이동자 누락」으로 크게 구분되며,

- 「세든 가구 누락(21.4%)」은 주로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많이 발생되며 이는 거처 내에 몇 가구가 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발생되므로 조사구 설정 당시부터 정확한 가구 파악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거처누락으로 인한 누락(13.7%)」은 외견상 거처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용 건물에서 많이 발생되어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조사된 거처에는 가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커 부착이 필수적임

- 「방문하지 않았거나 만나지 못해 누락(13.2%)」은 최근 들어 1인 가구 및 주간 부재가구가 급격히 증가한데 기인되며, 차기 조사에는 1인 가구 및 부재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동 직원 또는 통장의 협조가 요망됨

- 「이동자 누락」은 이동자의 소재 파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나 이들의 누락율이 높아 차기 조사에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

- 누락사유 중 기타부분에는 대다수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가구 누락」과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어서 가구누락」이 주된 원인이므로 향후에는 누락사유 세분화가 필요함

다. 중복 가구 및 가구원

○ 중복 가구원의 중복사유를 보면 「실제 없는 사람이 가공으로 조사된 경우」, 「취업·취학으로 외지 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가구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며 주말 등에 잠시 들르러 왔던 가구원」으로 크게 구분되며,

- 「실제없는 사람이 가공으로 조사된 경우」는 총 중복건수 중 34.2%를 차지하여 2000년 37.3%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러한 중복율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사구 설정 당시 정확한 가구수 파악과 총조사 시점까지 조사구 관리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취업·취학으로 외지 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가구원」, 「다른곳에서 살고 있으며 주말 등에 잠시 들르러 왔던 가구원」은 각각 21.1%. 8.7%로 이는 상주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조사원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

라. 조사원 특성별 오차율

○ 조사원 특성별로는 퇴직공무원(0.52%)과 부녀회원(3.39%)의 총오차율이 낮은 반면, 대학생(4.41%)의 오차율이 높게 나타남

○ 조사원 연령별로는 30대의 총오차율(3.25%)이 가장 낮고, 60세 이상(7.12%)과 20대와 50대(5.76%)의 총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원은 30~40대 가정주부가 오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조사원 선발시 우선 채용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사후조사

가. 조사방법

○ 금번 사후조사는, 조사환경의 열악화 등 외부적 요인과 검토기간이 충분치 못했던 내부적 요인 등으로 종전과 같이 종속조사 방법으로 실시함

- 총조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조사내용의 객관성이 독립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나, 독립조사는 종속조사에 비해 응답자 부담 가중, 대조(매칭) 작업의 난이, 분석시간의 장기화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임으로 향후 검토사항으로 남겨둠

나. 조사원

○ 금번 조사는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경험이 많은 우리청 조사직원을 통해 실시하였는데, 경상조사 업무을 병행함에 따라 업무가 과중

○ 조사원의 시군구 교체 조사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였음

다. 조사표 항목

○ 2005년 사후조사는 누락과 중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나 항목간의 연계 문제로 조사 및 입력시 질의가 많아 차기에는 항목 연계관계에 충분한 검토 필요
※ 총조사 응답여부, 총조사 당시 머문장소 및 머문사유, 총조사 응답장소

○ 조사표에서 항목 배열시에 총조사와 사후조사의 항목순서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

- 성별이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어 총조사 항목에서 미입력이 대량 발생함

라. 조사표 입력방식

○ 웹(web)기반에 의한 사후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 지방통계청에서 사후조사표 입력으로 자료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으나, 본부에서 내용검토시 각 조사표를 하나 하나 불러내어 수정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음

- 통계표 제표작업은 항목간의 연계를 통한 제표 작업이 가능하여 다양하게 분석을 할수 있음

- 이번에는 응답자의 가구원번호를 응답자의 인구특성과 매치하여 응답자 특성에 대한 통계표를 처음으로 분석할 수 있었음

마. 기타

○ 소지역(시군구) 추정이 가능한 표본규모 선정이 필요

○ 웹환경(web) 입력시 총조사 자료와 사후조사 자료의 생년월일 및 양·음력 입력시 불일치되는 자료에 대하여 확인메시지 필요

○ 사후조사 기간 중에 호남지역에 폭설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음

- 조사담당자 시군구 교체로 이동상에 어려움 발생

개선 방향

○ **조사방법 검토**

- **종속조사 방법**(이미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내용의 객관성이 **독립조사**(이미 조사된 내용과는 무관하게 조사하는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할 수 있으나, 독립조사는 종속조사에 비해 응답자의 부담 가중, 대조작업의 난이, 분석시간의 장기화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임으로 향후 검토사항으로 둠

- 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문 면접조사 방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

- 전화조사 또는 우편조사 등의 다른 방법으로 먼저 실시한 후 미비한 가구에 대해서만 방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시험조사 기간 검토**

- 시험조사(2004.12.)를 실지조사(2005.12.)보다 1년 전에 조사항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어 실지조사에서 조사항목 및 입력프로그램을 검토하지 못하여 본조사에서 발생할 잠재 위험에 대비할 필요

- 시험조사를 **2회 정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조사표의 조사항목과 입력프로그램이 완성된 후 검토 필요

○ **조사항목**

- 누락과 중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나 항목간의 연계문제로 실지조사시 질의가 많아서 충분한 검토 필요 (총조사 응답여부, 총조사 당시 머문장소 및 머문사유, 총조사 응답장소)

○ **인력동원**

- 지방청(지방사무소) 직원 1인 1조사구 담당(730명)

- 지방청(사무소 조사직원 경상조사 담당지역 시군구 교체조사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였음.

- 지방청(지방사무소) 직원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내용검토 기간과 사후조사 실지조사 기간이 겹쳐서 인력동원에 애로사항이 있었음

○ **조사표류 제출**

- 조사표 제출이 실지조사 및 조사표 입력후 바로 이루어졌으나 본청에서 입력자료 내용 검토이후 충분한 질의 결과이후 제출토록 검토

○ **준비조사 및 실지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를 각 시·도에서 회수방법 검토 필요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입력이 마감된 후 입력프로그램에서 사후조사 해당 조사구의 자료를 추출하여 사후조사표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 검토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터넷조사로 응답한 경우 응답내용의 비밀보호 때문에 인터넷조사로 응답한 경우가 많으나 사후조사의 재방문에 대해서 불만 많아 방문조사보다는 전화조사 또는 우편조사등 다른 방법 조사도 검토 필요

○ **분석단계**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표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조사 실시로 인하여 총조사 조사표의 입력결과와 사후조사 결과의 연계 검토 필요

29› 자료처리

평 가

□ e-Census시스템, ICR시스템 등 최신 IT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자료처리시스템의 적기 구축 및 장애없는 운영으로 인해 원활한 자료처리 수행 및 신속한 총조사 결과제공

○ 전수집계
- 인구부문 : 2006. 5월 (2000년 대비 4개월 단축)
- 가구·주택부문 : 2006. 7월 (2000년 대비 3개월 단축)

○ 표본집계
- 인구이동, 통근통학 : 2006. 9월 (2000년 대비 3개월 단축)
- 산업·직업, 주거실태 : 2006. 11월 (2000년 대비 5개월 단축)
- 여성, 아동, 1인가구 : 2006. 12월 (2000년 대비 7개월 단축)

□ e-Census시스템을 통한 자료처리 실시로 자료처리기간의 단축, 웹을 통한 실시간 조사현황 파악 및 관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

□ 코딩작업의 자동화로 기존대비 코딩소요인원 대폭 감소 등 자료처리 효율성 제고

○ 2000년 대비 산업/직업분류 코딩인원 연인원 19천여명 감소
- 2000년 : 연 27,000여명 투입 (900명 × 1개월 × 30일)
- 2005년 : 연 7,650여명 투입

개선 방안

1. 입력/내검

□ 거처/가구번호 부여기준에 대한 교육강조

○ 가구구분에 따른 거처/가구번호 부여기준 미숙지로 인한 키수정 요청 다수 발생, 특히 다세대와 다가구 구분 및 오피스텔 처리 방법에 대해 많이 혼동한 바

○ 향후 총조사시 조사표입력 전 가구구분 정의와 거처, 가구번호 부여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필요

□ 거처/가구번호 수정요청 전 사전확인 기능 필요

○ 잘못된 거처/가구번호로 키수정 요청 일부 발생한 바 담당 조사구에 한하여 변경요청 권한 부여 및 중복번호 체크기능 등 사전확인 기능 필요

□ 사양이 좋은 입력/내검용 PC 설치 유도

○ 오류수정 화면에서 조회/처리 항목이 많을 경우 일부 저사양 PC에서 자료 로드시간 많이 걸림

□ 시설조사구에 대한 개념정비 및 교육 철저

○ 내검단계에서 시설조사구와 일반조사구간의 조사구변경이 많이 발생한 바 향후 총조사시는 시설조사구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비, 모호한 사례정리 후 조사원 및 내검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교육 필요

□ 조사내용 질의확인란 마련

○ 내검시 조사대상가구에 질문한 내용 및 가구특이사항을 기재해 놓아 다음 내검시 참고하게 함으로써 내검수행에 도움

- 미혼모 등 사생활적 측면이 강한 사항에 대한 질의/확인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향후 중복질의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감소 예상

□ 일관성 있는 사전 내검처리지침 필요

○ 조사내용이 모호할 경우 답변자에 따라 내검처리지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호한 사례에 대한 사전 정리 및 교육 필요

○ 시스템 공지사항 등을 통한 내검지침 하달시에도 내검장소별, 내검원별 이해정도가 상이하여 일부 내검처리내용이 불일치한 바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또한 특이사항 발생 후 처리지침이 고지되어 일률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일부 발생

□ 내검장소 및 장비 사전준비 철저

○ 일부 내검장소의 경우 공간협소로 불편

○ 좁은 책상을 사용한 경우 조사표를 펼쳐 놓기 곤란

□ 조사내용 임의수정 방지장치 필요

○ 내검수행간 전화질의 등의 내용확인 없이 임의수정한 자료가 일부 발견된 바 임의수정에 대한 방지대책 필요

○ 조사자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지침서 마련 및 임의수정 방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원 교육 필요

2. 조사표 이송

□ 내검장소 선정시 고려사항

○ 원활한 조사표류 상/하차를 위해 가능한 저층의 대형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하며 화물차 주차공간이 충분한 건물 활용

○ 조사표류 상/하차 운반경로상 계단이 없어야 원활한 작업 진행

□ 조사표류 결속시 고려사항

○ 결속크기가 30cm 이상일 경우 결속묶음 무게로 인하여 하역 및 서고 입고시 애로
○ 일자 2회(=) 결속시 묶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십일자(+) 형태로 결속
○ 묶음 결속번호 부여시 전수, 표본 등 조사표류별로 부여
○ 밴딩결속시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해 작업테이블 필요

□ 이송차량 선정시 고려사항
○ 하역차량 높이 제한
-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높이가 2.8m이므로 하역차량은 2.8m미만(운전석 위 화물적재함 높이 포함) 차량이용

□ 조사표보관장소와 인접한 내검공간 필요
○ 본청내검시 조사표보관실(1동 지하)과 내검장소(3동 10층, 12층)가 분리/운영됨으로써 조사표이동에 많은 시간 소요

□ 신속한 PC 유지보수 필요
○ 내검용 PC를 외부업체에서 임차하여 사용시 PC 장애시 신속한 수리 미흡
→ 향후 장기간 PC 사용시 임차 외 자산취득하는 방안 고려

3. ICR 자료처리

□ ICR용 조사표작성시 컴퓨터싸인펜 사용금지
○ 컴퓨터싸인펜 사용시 인식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ICR용 조사표 작성시 볼펜이나 수성싸인펜을 사용하도록 교육

□ 조사표 기입누락시 전화번호 미기재 등에 따른 내검처리 어려움
○ 조사표 전화번호기입 및 현장 육안검사 등 필요
○ 조사표 기입누락 방지 교육필요

□ 주소기재시 법정동 기입 경우 및 행정동(1동-7동)동 분류되지 않는 경우 일부 발생으로 자동코드 생성 어려움

○ 법정동 기입(4%), 행정동 동 분류않됨(3%) 발생

○ 주소란 메모장 등을 활용하여 통반기입, 주위건물명, 전화번호 기입 필요

4. 인터넷조사

□ 조사구번호 부여문제 개선

○ 주소DB의 불완전성과 실제 사용 주소와의 불일치 등으로 자동 부여가 62.1%에 불과하여 입력에 불편을 초래한 바

→ 첫째, 현재와 같은 업무절차에서는 주소DB의 정비가 우선 필요

→ 둘째, 2001년 스위스에서 시행했거나 2006년 뉴질랜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구별 PIN번호 부여 방법 검토 필요

□ 응답자 친화적 화면 재편성 필요

○ 표본조사의 경우 한 화면당 조사문항이 1개로 구성된 사례가 다수있어 응답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서버 접속 횟수가 늘어나는 역기능이 발생

→ 조사내용 파악에는 1문항씩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화면구성을 하였으나, 응답유도를 위해서는 화면구성을 응답자 친화적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버의 부하경감을 위해서도 필요

□ 응답자 PC에 장애가 발생

○ 사양이 낮거나 별도의 방화벽을 가진 일부 응답자의 PC가 갑자기 down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응답자가 불만을 표출

→ 인터넷 조사시스템 개발시 사양이 낮은 Window 98까지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나, 충분한 검증기간을 갖지 못해 window 98이나 별도의 방화벽과 충돌되는 보안모듈의 일부 기능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하였음.

일회성 대규모 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적어도 시행 1년전에 개발하여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를 통해 기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조사 참여도 증가필요

○ 시스템 개발과 전산환경 구축을 위해 투입한 노력과 예산에 비해 일반 국민들의 조사에의 참여도는 예상보다도 매우 저조함

→ 홍보 강화, 사용에 편리한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의 참여 제고방안 검토 필요

□ 신청후 24시간 대기 문제 개선필요

○ 조사구번호가 매치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조사구번호를 24시간내 수동부여하여 전수/표본 구분 후 입력토록 하였는 바 신청 즉시 입력이 안되어 일부 사용자 불만토로

→ 대기시간 감축을 위해 주소확인 전담자의 증원과 입력가능함을 즉시 통보하는 SMS기능 활용이 필요

□ 인터넷조사가구에 조사원이 방문하는 이중조사 문제

○ 인터넷조사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문하여 면접하는 사례가 있어 불만 토로

→ 조사원에 대한 읍면동 관리자의 철저한 관리 및 보다 용이하게 인터넷 조사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필요

30>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평 가

□ 조사기획 및 현지조사시 고려사항

○ 총조사시 총관리자에게 해당지역 주민등록상 100세이상자 관리

- 2005년 기준 주민등록상 약 2,700명이므로 읍면동 당 평균 1명 미만의 고령자가 존재하므로 총관리자의 업무부담은 그리 크지 않음

- 총관리자는 읍면동의 공부상 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조사시 참고케 하여 누락 방지 및 연령을 확인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함

○ 주민등록 자료 수집시 시·도를 통하여 수집

- 주민등록 자료를 시도를 통하여 명부자료는 엑셀로 양식을 지정하여 보고케 하고, 공부상 자료는 출력하여 지방사무소에 보관케하여 현지 조사시 참고토록 하게함

- 행자부 자료와 지자체 자료와의 불일치로 인한 현지 확인시의 혼란을 최소화 하게 하고, 현지 확인시 지자체로부터 다시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는 시간낭비 최소화

○ 현지 확인시 고려사항

- 현지 확인시 일부 지역에서 전화로 조사하려는 경향(특히 만 100세미만)이 나타났는데 비록 100세미만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현장 확인 토록 독려(전화로는 주소 및 조사 가능여부 등만 확인)

- 보내준 명부상 자료의 모두에 대해서 조사표 작성 및 엑셀 자료입력 하고, 사망, 행불등으로 조사가 불가능 할 지라도 그 사유를 기재해오도록 해야 함(명부상 자료와 최종 조사표 매수 일치)

□ 자료처리시 고려사항

○ 1차 내용검토

- 지방사무소에서 입력된 엑셀자료와 조사표를 대조하여 100세이상과 미만을 구분(엑셀자료에 비해 조사표가 적게 작성되어 들어왔음)

○ 2차 내용검토

- 본청 총조사 내검실에서 고령자 조사표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를 검토하여 양측의 자료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로 직접 현지 확인(고령자조사와 총조사상 100세이상의 숫자는 다름)

○ 3차 내용검토

- 고령자 조사와 총조사상 100세이상의 자료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함

→ 차기에는 조사대상이면 비록 빈조사표라도 작성케 하여 당초 설정된 조사대상과 일치토록 제출 하게 해야 함

→ 조사기준시점이 총조사와 고령자조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100세이상 인구 또한 동일하게 나오도록 자료처리를 해야 함

→ 최고령자 재확인 및 일부 오류자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반드시 해야 함

□ 자료분석(결과보고)시 고려사항

○ '95년, 2000년은 공표를 하지 않고 내부용으로 결과자료를 작성했으며,

특히 2000년의 고령자 숫자는 총조사의 숫자와 차이가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총조사의 숫자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음

- 이로 인해 금번 고령자 발표시에는 2000년과 항목별 비교자료는 공표하지 못했음(내부적으로 2000년과 항목 간 비교분석자료 작성됨)
- 차기에는 전주기 대비 비교해서 자료를 작성해야 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표 설계에 반영해야 함

2005인구주택총조사 100세이상 고령자 조사 자료처리 절차

구분	총수(명)	절차	일정
□ **조사대상 인원**	**3,403**	· 총조사 자료 + 주민등록자료 - 중복자료	· 2006. 2월 초
○ 총조사 자료	1,938	· 자료처리 용역회사(skc&c)로부터 세는 나이 100세 이상 자료 입수	· 1월 초
		· 지방사무소에 총조사 조사표류 복사하여 보관	· 1. 31.
○ 주민등록 자료	2,684	· 행자부 주민제도과를 통해 세는 나이 100세이상 주민등록자료 입수(성씨/시도/시군구/연도/성별)	· 1. 22.
(총조사 및 주민등록 중복자료)	1,219	· 총조사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를 매치시켜 중복 (불완전한 주민등록자료로 완벽한 매치가 힘듬)	· 1월 말
□ **조사완료 인원**	**2,856**		· 4. 7.
○ 만 100세이상	1,050	· 최초 입력된 엑셀 자료를 조사표와 대조하여 분석	· 4. 10~14
○ 만 100세미만	1,730	· 만99세이하, 입력오류, 일제시대 및 6.25시 호적오류, 후처, 언니 등의 호적으로 기재	
○ 사망 행불 등	76	· 주소등은 기재, 사유에 사망, 행불 등으로 판명	
□ **미회수 자료 유형**	**547**		· 5월 초까지 유형 분석
○ 총조사	64	· 조사시점이전사망자(15), 소재불명(32), 조사불능(10), 기타(7)	
○ 주민등록	342	· 조사시점이전사망자(55), 소재불명(58), 조사불능(6), 기타(223)	
- 추가중복	141	· 고령자 현지 조사시 추가 중복으로 확인됨	
□ **1차 자료 처리**	**1,050**	· 최초의 만100세 이상 입력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생년월일을(양음력고려) 기준으로 100세 유무 판단	· 4. 17~28
○ 모두 일치	804	· 띠=생년월일=만나이	
○ 띠가 불일치	88	· 2세차이 3건, 1세차이는 양음력 차이로 판단	
○ 만나이 불일치	158	· 만 100세미만(49), 100세이상(109)	
○ (기타 부실자료)	(37)	· 연령자료는 일치하나 조사표 검토결과 사망행불 등 기타 부실자료	
○ (2001년과 불일치)	(25)	· 2001년 고령자 조사시와 생년월일 불일치	
○ 1차 자료처리 후 만 100세이상	964	· 1,050-(만나이 100세미만 49 + 기타 사망행불등 37)	
		· 자료처리 내검팀과 고령자 자료 계속 수정	· 4. 17~5.12
□ **2차 자료 처리 후 만 100세이상**	**976**	· 2000년 고령자와 생년월일 불일치(25), 기타 응답 부실자료(8)를 대상으로 사무소에 재확인	· 5.12
		· 부실자료 8건중 4건은 100세이상으로 확인, 연령 불일치 자료중 5건이 불일치 였고, 그 중 1건은 100미만, 서울에서 1건 신규로 100세이상으로 확인	· 5.15
□ **총조사자료와 비교 후 최종확정**	**961**	· 총조사 및 고령자자료를 개별 대조하여 중복조사 및 만나이 환산착오 등 조정	· 6.15

31> 평가 및 포상

평 가

❑ 총평

○ 2005 인구주택총조사 평가 및 포상은 과거 어느때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시

○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포상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 하였음

○ 포상 수여식은 시대변화 반영, 혁신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포창 수여방식, 꽃다발 증정, 기념 촬영, 사회자 외부인사 초청 등 업무에 반영

○ 열심히 노력하고 어려운 조사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한 유공기관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서 향후 대규모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유도

○ 2005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의 성공적 수행에 적극 기여한 업무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산업시찰 실시로 성취감 및 자긍심 고취

❑ 평가

○ 특히 평가방법은 기관평가와 개인평가를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전 예비심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및 운영

○ 시도, 시군구 및 지방청(사무소)의 평가자료가 너무나 방대하여 자료 검토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평가자료 및 평가 워크숍 개최(결과보고서 별도)로 향후 개선자료 및 업무 참고자료가 많이 축적됨

○ 평가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는 주관부서(인구조사과)에서 실시하고, 공적심사 단순한 결재(서명)를 혁신기획관실에서 형식적으로 실시

○ 통계청 차장의 평가에 대한 역할론을 내세워 인구주택총조사 전반에 대한 불신풍조 하소연은 아쉬운 대목임

❑ 포상

○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포상은 역대 최대의 규모로 정부포상 49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1,500개, 통계청장 2,000 개 등 총 3,549 개의 포상을 수여함

- 금번 포상에서는 인력동원에 노고가 많았던 지방청(사무소) 직원에게 과거에 비해 포상 수량이 많이 배정된 것이 특징이라 할 것임
- 처음으로 순수 민간분야에 정부포상을 포함하여 많은 수량의 포상 규모가 배정 되었음

○ 포상 수여식은 시대변화 반영, 혁신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포창 수여방식, 꽃다발 증정, 기념 촬영, 사회자 외부인사 초청 등 업무에 반영

○ 포상 추천 대상자 선정시 포상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상훈프로그램 확인, 신원조위, 범죄사실 조회, 불공정 거래 사실 확인 등의 과정에서 발각된 경우가 발생하여 대상에서 배제시킴

○ 공적조서 작성방법에서 정부포상은 행정자치부 상훈 프로그램의 사용하고, 부총리겸 재경부장관과 통계청장 표창은 일반 종이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업무 추진과정상 모두 상훈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실무자들이 많은 고생을 함

❑ 포상금 지급

○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유공기관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반응이 좋았음

○ 시도, 시군구 및 지방청은 적절한 규모로 지급되었으나, 읍면동의 포상금 십만원은 다소 적다는 견해가 많았음

○ 2005년도 확보한 포상금은 전액 조사요원에게 지급하였으나, 담당라인에서 의견이 달랐으나 상급자의 의견으로 절충

- 실무자는 관련규정과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에게 지급하자는 견해를 내세웠으나, 상급자는 조사요원에게 지급하자는 견해를 내세움

❑ 산업시찰

○ 조사실시기관에서는 해외연수 및 시찰을 건의하였으나, 통계청에서는 국내 산업시찰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업무유공자를 중심으로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체기초 및 서비스업총조사 등 대규모통계조사의 공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적격자 선발

- 획일적인 기관별 인원 배정을 지양하고 종합 평가 등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은 인력중심으로 실시

○ 향후 대규모통계조사의 조사체계 확립 및 기반 확립을 위하여 해외연수와 함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

개선방안

○ 평가, 포상, 포상금 지급 및 산업시찰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과거 선례답습 위주의 업무추진을 지양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 추진

○ 포상 수여식은 당초 업무계획상으로 2006.6월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4월초까지 추진하라는 청장의 업무지시로 담당실무자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

- 향후 상급자는 이러한 사업 일정 변경은 종합적인 판단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것임

○ 상급자가 업무추진에 사적인 감정인 듯, 이사람은 대통령상 감이 아니고, 이사람은 대통령상 주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동료간 상하간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요함